

역사적 시각에서 본: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成長 動因)

2014년 5월 30일

김한응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역사적 시각에서 본: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成長 動因)

김 한 응

<차 례>

머리말

제1장 모델의 설정

1. 들어가며
2. 모델의 설정

제2장 착취형 정치경제제도 아래의 조선조와 일제식민지시대

1. 조선조와 유럽의 흑사병
2. 붕당정치와 영국의 명예혁명
3. 외부충격이라는 결정적 전기에 대한 조선조와 일본의 반응 차이
4. 일제식민지시대
5. <별장(別章)>: 법치주의

제3장 해방에서 4.19.혁명까지

1. 머리말
2. 6.25.전쟁의 빛과 그림자
3. “과두정치의 철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
4. 다원주의(pluralism): 국민에게 힘이 실리는 과정(process of empowering)

제4장 4.19.혁명에서 대통령직선제까지

1. 아첵오울루 교수팀의 한국에 대한 평가
2. 5.16.군사쿠데타는 박정희 독재체제를 낳았는가?
 - (1) 4.19.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 (2) 박정희 혁명주도세력의 속내와 국민적 대세
 - (3) 박정희의 정책기조
3. 전두환 시대
 - (1) 개관
 - (2) 우리나라 경제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무역수지 흑자

제5장 대통령직선제에서 IMF 위기까지

1. 대통령 직선제의 채택
2. 선순환의 발동과 공산주의의 부침
3. IMF 위기의 원인과 효과
 - (1) IMF 위기의 원인
 - (2) IMF 위기의 효과

제6장 IMF 위기 이후

1. 우리경제의 조락(凋落)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2. 조락의 요인들
 - (1) 착취형제도로의 이행
 - (2) 영국과 인도의 교훈
 - (3) <별장(別章)>: 통치불능사태(ungovernability)
 - (4) 결론

맺음말

<주석(註釋)>

머리말

필자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 “산업화세력”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고 “민주화세력”은 우리나라를 민주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주장이 필자에게는 설득력이 없었다.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라는 이분법(二分法)은 근본적으로는 립셀(Seymour Martin Lipset)이 처음 주장한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에 의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근대화이론에 의하면 독재는 성장을 불러오고 그 뒤에 민주화가 온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첸오울루(Daron Acemoglu) 교수팀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첸오울루 교수팀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 때부터 포용형 정치경제제도를 실시해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저서 <Why nations fail>은 포용형 정치경제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경제성장이 좋아지고 그 반대인 착취형 정치경제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실패한다는 사실을 동서고금의 역사를 원용해서 증명하려 했다. 즉 이들은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률이 포용형 정치경제제도를 실시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아첸오울루 교수팀은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이후의 기간만을 분석하였지만, 본고는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을 조선조 후기 이후 지금까지를 이들의 방법론에 의존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게 만든 강력한 원동력은 해방이후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자라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임을 입증하려 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민주주의 덕분에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한 것을 입증해보려 한 것이다.

아첸오울루 교수팀의 결론에 대한 반론과 같은 것이 인도의 예이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구도 많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별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를 설명하려고 어떤 인도의 학자는 우리나라, 대만 등의 높은 성장이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학자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사회주의적 경제제도가 민주주의 아래에서 유지되어도 그것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올슨(Mancur Olson)에 의하면, 경제성장을 촉진한 요인은 아무리 정교하게 분석한다 해도 최종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estimates of the sources of growth, however meticulous, subtle, and useful, do not tell us about the ultimate causes of growth.)는 것이다.¹⁾ 이런 제약은 있지만, 아첸오울루(Daron Acemoglu) 교수팀의 분석도구를 차용해서 분석하면, 순수하게 경제학적 방법론에 의존할 때보다는 분석내용이 훨씬 더 깊어지고 다양해지는 이점이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 본고의 제2차 목표이다.

제1장 모델의 설정

1. 들어가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들어오는 전환기에서 이집트의 경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때의 이집트 경기를 요즈음의 중국경제와 비교하는 학자가 있다.1) 그런 절호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집트 경제가 아직도 최빈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후 얼마 안 되어, 정확히는 1907년경에 닥쳐 온, 세계적 불황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집트와 관련하여 중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집트 경제가 얼마나 활기가 있었느냐를 실감나게 표현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중국도 조만간 이집트가 겪은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학자의 은유적 예측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예측으로 말하면 소련의 붕괴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20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시야를 좀 더 넓히면, 제2차 대전 후 전승국일 뿐 아니라 산업혁명의 주역으로서 한 때 세계경제를 선도하였던 영국이 조락(凋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전국인 일본, 서독(현재 독일) 및 이태리는 얼마 전까지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이에 반해 소련의 붕괴 후 동구권에 나타난 신생 민주주의자들은 모두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흥미로운 사건도 나타난다.2)

일본, 서독 및 이태리가 제2차 대전 당시 독재국가들이라는 사실(추축(樞軸)국가들)을 상기하면, 독재국가들은 패망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공산주의국가들은 붕괴 후 심각한 정부 부패와 마피아 같은 범죄로 국가경제가 시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인도 학자는 인도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독재국가인 중국, 싱가포르(이 광요의 사실상의 장기집권), 대만(국민당 독재), 남한(박정희 독재)에 경제발전이 뒤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3)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배경에 놓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생각해 보자. 1997년 IMF 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처럼, 조락(凋落)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이 순간 새로운 도약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도 이를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또 노력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통계자료들은 아직은 우리나라의 조락을 예단하고 있는 듯하다.

어쨌든 해방 후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의 끈질긴 파괴공작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는 기적 같은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있고, 또 최근 우리나라가 조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을 찾아낸다면, 조락을 예방하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길

을 발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조락의 길을 피할 없다고 보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중국이 어떤 이유로 20세기 초의 이집트가 된다면 중국에 수출시장의 25% 이상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 충격을 견디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 요즘 일본이 아베노믹스(Abenomics) 등 여러 방면으로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이에 의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중국이 무너지고 일본도 계속 시들시들 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버티나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관해, 그리고 적어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관해, 해답의 실마리를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연구가 아첵오올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가 공저한 책이다. 이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경제학적 방법론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9세기 아담 스미스와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학자들은 경제문제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했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마셜과 같은 학자가 경제학을 정치학에서 분리된 독립적 학문분야로 발전시키려고 객관적 분석방법을 강조하였다. 그 이후 경제학은 수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왔다. 이런 경향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다소 주춤해지기는 했다.

이런 경향 때문에 경제학은 최근까지 정치학 내지 정치를 무시해왔지만, 그런 속에서도 슈페터 같은 학자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기업, 시장은 물론 정부와 정치를 그의 분석에 포함시켰다.4) 경제학자들은 자발적 거래에 근거하여 시장과 관련된 권력을 다루고, 거래를 제한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통해 정부와 정치에 관한 이론을 취급하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세계적 불평등의 해소 그리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와서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5)

이런 분위기는 영국의 유명한 잡지인 The Economist가 오래 전부터 “Economic focus”란 이름의 칼럼에서 경제학의 최근 동향을 소개해왔었는데, 2012년 1월 14일자부터 이 칼럼의 이름을 “Free exchange”로 바꾸고 정치경제학적 아이디어까지 취급하기 시작한 것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이 칼럼은 예컨대 컨테이너가 글로벌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등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Robust Political Economy”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정치경제학에서의 신사고”(新思考: New Thinking in Political Economy) 운동은 경제학에서 제공하는 기술적 지식(technical knowledge)과 속세적인 철학(worldly philosophy)에서 수집되는 지혜(wisdom)를 결합시키는 새로운 작업을 권장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6)

이런 시각에서 보면 역사상 최초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체험한 나라인 영국이 부각된다. 영국에서는 18세기 후반, 획기적인 기술적 돌파구(breakthrough)를 찾아내 그것을 산업에 적

용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서서히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 후 산업화는 영국에서 서부 유럽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전파되었고 오늘날에는 일본, 싱가포르, 및 한국이 포함된 30여개의 부국 등을 위시하여 온 세계에 퍼져있다.7)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세계에는 4 종류의 나라 즉 선진국, 저개발국, 일본 그리고 아르헨티나 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8) 이 말은 제1차 대전을 전후해서는 아르헨티나가 세계 최대부국들 중 하나였으나 그 후 쇠퇴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와서는 확실히 후진국이 되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쿠즈네츠에게는 수수께끼로 보였지만 포용형 제도와 착취형 제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이런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아첸오울루 교수 팀의 주장이다.

그에 의하면 나라가 망하는 가장 공통된 이유는 그 나라가 착취형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착취형 제도 밑에서는 사람들이 저축하고 투자할 인센티브가 없고 또 이노베이션을 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9) 북한이 지금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착취형 제도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은 이런 착취형 제도를 더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 통화개혁까지 단행하였다. 최근 북한에 만연되었던 기아(饑餓)상태를 완화시켜 볼 생각으로 원시적인 형태의 시장을 허용하였는데, 이런 원시적인 시장경제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북한 당국은 이런 자들이 북한체제를 위협할까 두려워 이들이 부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또 통화개혁을 했다는 것이다.10)

2. 모델의 설정

우리 경제가 IMF 위기 이전까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오다가 그 후 성장률이 둔화되게 만든 요인이 무엇일까? IMF 위기 이전의 높은 성장률이 박정희 정권의 독재체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인 노태우 대통령 때의 높은 성장률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노태우와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지속되었던 높은 성장률이 IMF 위기 이후 성장률이 둔화된 것을 독재체제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독재체제의 성장촉진효과가 떨어진 때문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이 “예스”라면 이제 성장률을 높이는 길은 독재체제를 다시 도입하는 길 뿐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거나 성장을 희생시키거나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岐路)에 서게 된다. 이런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최근까지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이론의 창시자인 립셋(Seymour Martin Lipset)에 의하면 민주화는 경제성장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첸오울루 교수 팀은 독재가 성장을 가져오고 그 뒤에 민주주의가 온다는 주장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1).

우리나라에서도, 근대화이론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의 기초를 쌓는데 기여하였고, 그래서 시작된 경제성장 위에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민주화를 신장시켰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은 주지되는 일이다. 아첸모울루 교수 팀도, 우리나라에 관한 한, 이런 근대화 이론적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6.25.전쟁 중 국가로서 중앙집권화의 기반을 다지기는 했지만,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고 이승만과 박정희는 모두 독재적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를 지켰고 또 급속한 경제성장에 역점을 두고 성공적인 기업들에 자금과 보조금을 주었다는 것이다.¹²⁾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헌정사(憲政史)상으로는 4.19.혁명이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지녔음을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것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뒤에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독재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4.19.혁명과 5.16.군사혁명과의 관계도 프랑스 혁명 때와 같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근대화 이론으로는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나라를 민주주의와 더 나은 제도로 이끈다는 주장이 있다. 그 대표적 인사인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맥도날드 식당 수(數)가 충분히 많아지면 민주주의와 그보다 더 나은 제도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주장(post-modern version of modernization theory)하고 있으나,¹³⁾ 이 이론은 우리나라의 예를 보아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교육수준이 높아진 것에 비례해서는 노조가 강력해진 것과 그 부작용의 하나인 비정규직 제도가 생긴 것 그리고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린 것 이외의 효과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아첸모울루 교수 팀은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을 근대화 이론적 사관(史觀)에 서서 설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내지 발전과정은 정치권력이 사회 각층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다원주의(pluralism)(제3장 4. 다원주의 p.7 참조) 내지 포용형(inclusive) 제도의 발달과 연관시켜 보면 조선시대부터 최근까지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페닝톤(Mark Pennington) 교수에 의하면, 제도(institution)는 구성원(social actor)들의 상호작용을 조직화 또는 체계화(structure)하는 “게임의 룰(the rules of the game)”이다.¹⁴⁾ 그 대표적인 예가 사유재산제도와 같은 것인데, 이런 제도는 실생활에서 사람의 행동과 인센티브에 영향을 준다. 즉 이런 룰들은 개인과 조직이 경제발전의 중심을 이루는 경제적 기술적 이노베이션에 종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룰을 포함한 정치제도는 성문헌법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소프트(soft)”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개인적 텔런트가 뛰어난 게이츠(Bill Gates)도 제도와 분위기가 그에 어울리지 않았으면 성공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¹⁵⁾

제도 중에서도 국가의 번영과 실패,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제도이다. 그러나 어떤 경제제도를 선택하느냐는 그 국가의 정치와 정치제도가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는 그 사회를 규제할 규칙을 선택하는 프로세스(process)인 것이며, 그런 프로세스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는 그 사회의 정치권력의 배분에 의존한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무시하고 순전히 경제학적 방법에 의존해서 해결책을 찾으려하면, 방법론적 제약 때문에 실패할 위험성이 높다. 예컨대 후진국 경제개발론이, 순수경제학보다는 인간자본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 같은 경제외적인 것들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공한 예를 보기 어려웠던 이유는 이 이론이 정치적 제도적 요인을 고려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첸오울루 교수 팀은 권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좁고 누구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군주정 같은 전제주의(absolutism)체제 밑에서는 경제가 쇠퇴하게 되고,16)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과 기술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권장하는 제도 밑에서는 경제가 번창하게 되는 현상을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찾아낸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정말로 위대한 발견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17) 그는 전자를 착취형(exclusive) 제도라고 하고 후자를 포용형(inclusive) 제도라고 했다.

이런 모형에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을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는 조선조와 일제식민지시대에는 착취형 제도가 지배하여 우리 경제를 계속 어려운 지경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해방이후는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되고 그 위에 6.25.전쟁과 같은 참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게 자유민주주의와 포용형 정치경제제도를 발전시켜갈 수가 있었고 그런 속에서 모두 열심히 경제건설에 참여하여 오늘과 같은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게 된 것이다.

IMF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조락(凋落)현상을 보이는 듯한 것을 경제학적으로만 보면 인구 감소, 투자부진 등으로 너무도 당연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가 어떤 이유로 착취형 제도로 서서히 변질되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결론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만약 착취형 제도와 비슷한 효과를 갖는 다른 요인이 생겨나고 있음이 밝혀져도 결론은 마찬가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착취형 정치경제제도 아래의 조선조와 일제식민지시대

1. 조선조와 유럽의 흑사병

우리나라가 최근 누리고 있는 경제발전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조선조의 초기까지도 갈 필

요가 없는 것 같다. 조기준 교수에 의하면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커다란 외부침략을 겪으면서 조선의 통치체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한다.1) 그러나 아래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이후 조선조 말까지 근본적이고도 특징적인 제도인 노예제도와 토지제도 등 경제제도는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사색당과 또는 봉당제도도 임진왜란 이전에 생긴 것이지만 조선조의 통치제도를 조금도 바꾸어놓지 못했다. 따라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전으로 가보았자 아무런 실익(實益)이 없을 것이다.

먼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보면, 이런 엄청난 외부침략을 당했으면 당연히 그 때 조선조가 망했거나 또는 그에 비교될만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어야 했다. 예컨대 이순신이나 권율이,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하였듯이, 조선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웠거나 아니면 양대 변란을 계기로 노예반란이라도 일어나서 우리 사회에 큰 변혁이 생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새로운 왕국의 출현이나 노예제도의 폐지로 인한 사회제도 개혁이 국민생활을 향상시켰을 것이다. 그렇게는 되지 못했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수모는 면하게 해주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뒤에 말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됨에 따른 희생은 대단히 컸다고 생각된다. 일본학자를 포함한 일부 국내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촉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독재가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주장만큼이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조선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짐작해보기 위해서는 조선조와 비슷한 시기의 유럽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봉건제도는 흑사병(Black Death)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 전염병이 유럽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병은 조선조의 태조가 즉위(1392)하기 40여 년 전인 1346년에 중국에서 돈 강(현재의 러시아)을 통해 전 지중해 지역으로 퍼졌고 1347년에는 콘스탄티노플, 그 후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1348년에는 영국에 도달하여 노동력을 크게 감소시켜 봉건질서의 기반을 흔들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농민들은 변화를 요구했고 이것이 성공하여 농민들은 강제노역과 다른 많은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흑사병의 영향을 통해 올지도 모를 제도의 변화를 막으려 했지만, 1381년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이 농민반란은 실패했으나,2) 이로 인하여 분위기는 그 전과 크게 달라졌다. 즉 농민반란 이후 영국에서는 봉건적 (강제적) 노동봉사량이 감소하였으며 과거보다는 농민들에게 더 유리한 노동시장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임금도 그에 따라 상승하였다.

유럽에서도 흑사병 이후 노동력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영국에서 일어난 것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서유럽에서 동유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동유럽 지주들은 그들의 노동력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농산물 공급을 늘리려 했다. 그리하여 동유럽에서는 중세기 초기의 노예제도 원형보다 더 엄격한 노예제도가 등장하였다.

이를 두 번째 농노제도(second serfdom)라고 하는데, 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우리

나라의 노비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동유럽이 아직도 경제성장에서 서유럽에 뒤지고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노예제도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로마의 노예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로마시대에도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들의 경험에 의하면 노예는 그 소유주에게 부(富)를 가져다주는 했지만, 기술적 이노베이션을 일으키지 못했고 따라서 그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시켜주는 번영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고 한다.3) 이런 사실로 볼 때 노비제도가 갑오경장까지 지속된 조선조에서 경제발전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흑사병은 동유럽과 서유럽에 미친 영향이 달랐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346년경에는 정치경제제도가 비슷했던 동유럽과 서유럽이 1600년경에는 그들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흑사병은 양날의 칼처럼 이 병(病)에 반응하는 국가의 태도에 따라 각국의 진로가 급격히 바뀌게 만들었다. 이렇게 변화의 계기가 되는 사건 또는 사태를 아첸오올루 교수 팀은 결정적 전기(轉機critical juncture)라고 부르고 있다.4)

이제 조선조의 노예제도를 보면, 이 제도는 일본에 의해 강제된, 근대화 개혁인 갑오경장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 노예제도에 대한 개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현종 때, 순조 때, 그리고 고종 때에 부분적인 개혁이 있었으나, 이런 개혁조치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비제도를 개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크게 바뀐 현실을 정부가 뒤늦게나마 쫓아가기 위한 추인(追認)조치들이었다.5)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노예제도가 조선조 말까지 유지되었지만, 서유럽에서는 고려조 때부터 노예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노예제도(serfdom)가 이보다 더 빨리 없어졌다. 런던에서는 노예제도가 1102년에 폐지되었고 1215년에는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 노예제도 폐지의 근거가 명기될 정도였다.

일본에서조차 노예제도가 16세기말경에는 사실상 사라졌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경장 때에 와서야 겨우 폐지되었으니 조선조가 얼마나 착취적이었는지 그리고 조선조가 왜 발전할 수 없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6)

노예제도 폐지의 근거가 된 마그나 카르타는 귀족들이 1215년 영국의 존(John)왕에 저항해서 그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그로 하여금 서명하게 만든 유명한 문서임은 주지되는 일이다. 이 귀족들은 존 왕이 마그나 카르타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왕이 마그나 카르타를 위반했을 때에는 왕의 성(城)과 토지를 점령할 권한을 보유하기까지 했다. 존 왕은 이 마그나 카르타를 혐오했지만 이 제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영국이 이때 이미 다원주의(多元主義: pluralism)를 향해 첫발을 내디디는 것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7)

2. 봉당정치와 영국의 명예혁명

이렇게 조선조가 망할 때까지 사회적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았고 노비제도의 근간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사색당파로 발전한 봉당제도는 영국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또 영국보다 더 치열하게 발전하였다. 주지되는 바와 같이, 우리 역사책에서는 봉당정치의 효시를 명종 때 (1545-1567) 사람들인 김효원과 심의겸의 대립에서 찾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명예혁명(1688) 이후, 힘을 얻은(empowered) 새로운 상인 계급을 대표하는, 휘그(Whig)당과 이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리(Tory)당이 모두 1670년대에 구성되었으므로, 당(黨) 제도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적어도 100년 이상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다원주의적인 정치경제 제도의 한 측면인 정당제도에서는 영국에 몇 백 년을 뒤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먼저 이 시기의 영국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 크롬웰(Cromwell)이 찰스(Charles)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1649년 왕을 사형시키고 독재정권을 세웠다. 즉 왕정체제가 크롬웰의 독재체제로 바뀐 것이다. 크롬웰 사후 1660년에는 왕정이 복구되어 찰스 2세의 즉위와 동시에 절대왕정이 복구되었다. 찰스 2세의 후임으로 1685년에 즉위한 제임스 2세는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을 더욱 강화했는데 이런 제임스 2세의 노력이 오히려 다시 내전(內戰)을 촉발하고 말았다. 이 내전에서 승리한 의회파가 오렌지 공 윌리엄(William of Orange)과 제임스 2세의 신교 파 딸인 매리(Mary)를 불러드려 두 사람이 동시에 왕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을 성공시킨 것이다.8)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던 영국 의회에는, 이 기간 중에, 두 개의 특징적 현상이 나타났다.9) 첫째로 의회는 왕과 그와 동맹한 엘리트 그룹에 저항하는 저급귀족, 상인, 및 신흥농부라는 벼락부자들 등 광범위한 이해계층을 대변하게 되었다. 즉 의회는 그 당시 영국사회의 광범위한 계층에 힘을 실어주는(empower) 기구(機構)가 되었다. 둘째로 그 결과로 의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권 지지자들에 저항하는 세력의 중심이 되었다.

명예혁명 성공 이후 의회와 오렌지 공 윌리엄은 협상을 통해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였다. 즉 1688년 의회는 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을 만들고, 이를 윌리엄의 대관식에서 낭독하여 법으로 발효케 하였고 이 선언의 이름을 권리장전(Bill of Rights)라고 다시 명명하였다. 이 권리장전의 규정들은 명료하지는 않았지만, 이 때 이후 이것이 영국의 중심적 헌법 원칙으로 확립되었다고 한다.10)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조에는 정당의 원시적 형태가 영국보다 100년 이상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당(黨)들은 영국의 정당처럼 발전하지 못했을까?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신흥 농부와 신흥 상인 등 자기들이 축적한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었다. 그리고 이들과 저급귀족들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조에서는 이런 세력이 없었다. 우선 봉당제도는 양반들만의 정치적 투쟁도구였다. 학문적 유대와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양반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하여 상호 견제하고 비판을 가하기는 했으나 그들은 “새로운” 부(富)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의” 부를 상대방에게서 쟁취하는 것이 목표였다. 정조(正祖)가 상당한 개혁을 하려했지만 그것은 노론(老論)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지, 신흥 계급이나 세력을 육성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조에서는 토지제도상 신흥 농부가 생겨날 여지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상업에 종사하였던 소위 난전(亂塵)계급은 영국식 신흥 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원래 좁은 국내시장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조선조 상인들이 국내시장에서만 활동을 했고 중국과의 상거래조차도 밀무역의 형태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밀무역도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에는 명과 청의 대외무역금지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명나라는 14세기 말과 15세기 초에 걸쳐 장거리 대외거래가 그들의 통치체제를 위협할까 두려워 이를 금지했었다.¹¹⁾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송 대(960-1279)때만해도 중국은 유럽에 앞선, 많은 기술적 이노베이션 예컨대 시계, 나침반, 폭약, 종이, 도자기제품, 주철용 용광로의 발명 등이 있었다. 그러나 1368년 명 태조(홍무제)가 즉위한 후 그는 해외무역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국가 즉 지배계급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조공과 같이 국가가 승인하는 경우에 국한해서만 대외거래를 할 수 있게 하였다.¹²⁾

명 영락제(성조)는 즉위 직후인 1402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무역을 다시 허용하였다. 예컨대 그는 환관인 정화(鄭和)가 인솔하는 대규모 선단을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및 아프리카 등으로 6번이나 파견하는 등 활발한 해외무역을 지원하였으나, 1422년에 와서 이 선단의 파견을 일시중지 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홍희제(인종)는 선단파견의 일시중지를 영구화하였고, 그가 급사한 후 즉위한 선덕제(선종)는 1433년 정화에게 마지막으로 선단의 인솔을 허용하고는 해외무역을 완전히 금지하였다. 그 후로는 모든 해외무역이 금지된 상태에서 그런 선박의 건조조차 금지하였다.

1644년 명나라가 만주족(금나라를 세운 종족으로 말갈, 여진 등으로 불림)에 의해 멸망한 후에도 이런 고립정책은 지속되었다. 명이 금지했던 해외무역이 1567년 임진왜란 때에는 일시 해제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1661년 청의 강희제는 다시 남쪽 해안과 상업적으로 가장 활발한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내륙으로 17마일 이동시켰을 정도로 더욱 대외거래 금지를 강화하였으며, 1693년에는 연안에서 선적(船積)하는 것조차 금지하였다.

이렇게 명, 청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국내정치의 안정을 대단히 중요시 했다. 그들은 국제무역이 상인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이들이 용기를 얻게 되면, 정치 즉 지배계급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잠재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국제무역을 통한 부(富)의 축적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촉진하고 그것이 기존의 정치질서까지 파괴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국제무역을 금지했던 것이다.

이 때 영국에서는 대서양 무역의 개통으로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으나, 중국은 그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채택하여 고립을 자초하였으며¹³⁾, 우리나라와 일본도 그 분을 받아 청(淸)의 고립제도 뒤에 숨어 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고립을 본받더라도 우리나라는 당시 왜구의 침범이 심했으므로 이에 직접 보복하거나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대마도 같은 왜구의 중심지를 공격했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세종 때 이후로는 없다.

물론 보복이나 공격이 어려웠을 가능성은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 국방정책의 기본이 무도즉안전(無道則安全)¹⁴⁾ 즉 길이 없어야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소극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극적 국방정책 아래에서는, 비록 보복을 하고 싶었어도 대마도까지 원정을 보낼 군대와 필요한 장비가 부족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과 무역이라도 증진시킬 수 있었을 터인데 그것도 하지 못했다. 청이 국제무역을 금지하고 있으니 그것을 본받는 것은 당시 조선조의 사대주의적 정책으로 볼 때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더욱이 1600년에 패권을 잡은 도구가와(德川) 막부도 국제무역을 금지하는 폐쇄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조의 상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밀무역 이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¹⁵⁾

그리고 조선조는 사상적으로도 유교에 간혀있는 폐쇄국가였다. 그 증거로는 북벌정책을 추구하던 효종이 승하한 직후, 조정의 주된 관심사가 북벌정책의 지속여부가 아니라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의 복상(服喪)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소위 예송(禮訟)논쟁이었다는 점과 이 논쟁에서 이긴 세력이 권력을 잡았고 그것을 승자와 패자 모두가 승복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봉당정치(奉堂政治)의 중심인 봉당이 학문적 유대를 바탕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므로 이론에서 밀리면 권력까지 내놓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함병춘에 의하면 “주자학적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취약점은 폭력을 무조건 부정하고 도덕만으로 인간에 대한 통치가 가능하다는 환상을 만드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정치와 관련된 일체의 폭력을 싫어하[여] 군인을 천시하게 되었다.”¹⁶⁾ 이런 주장을 좀 더 연장해 보면 국방을 명과 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므로(무도즉안전은 다른 차원의 문제)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조가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는 정조(正祖) 때(1776-1800)의 실학자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가 당시 청나라에서 배울 것이 그렇게 많다고 본 점 자체가 당시 조선조가 (서양에 비해) 얼마나 낙후되어 있었고 기술수준과 학문적수준이 뒤쳐져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통찰력도 조선조의 미래를 바꿀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의 시대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을 때(1776)에 상응하는데, 자기의 출신성분(서열: 庶孽)으로 보아

도 조선조의 개혁방향을 예컨대 신분제도 철폐와 같이 더 강력하게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했다. 그의 북학의에서 지금도 높이 평가받을 점은 농본억말(農本抑末) 즉 상업억제정책이 잘못되었음으로 상업과 생산을 장려하라고 지적한 점 정도라고 할 것이다.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 쓸수록 자꾸 가득차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비단을 입지 않으면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사농공상 모두가 가난해져서 서로 도울 길이 없다.”¹⁷⁾

마지막으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조선조에서 18세기 이후 난전을 중심으로 상업이 크게 발달했음에도 즉 난전 계급(보부상 포함. 이하 같음)이 정부통제에 맞서서 시장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조의 경제를 번영으로 이끌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난전계급이 신흥 세력으로 성장할 수 없게 만든, 예컨대 해외무역의 금지 등 장애요인이 있었지만, 시장은 정부통제를 뚫고 경제를 반듯이 번창하게 만든다는 자유주의 이론적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장애요인을 난전 계급이 극복하지 못했던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슨(Mancur Olson) 교수의 이론이 필요하다. 그에 의하면 시장은 서로 전쟁하는 나라 사이에서도 열리며, 또 규제가 아무리 심해도 열린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시장교환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너무도 커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난전계급이 조선조 경제를 부흥시키고 자기들이 조선조 정치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할 수도 없었던 이유는 당시 허용되고 있었던 시장제도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물론 난전계급 층에서 큰돈을 벌어들일 비전이 있는 지도자가 없었던 것은 또 다른 요인일 것이다.

올슨에 의하면 시장은 상품의 상호교환과 같은 간단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원시적 시장(self-enforcing market)에서부터 대출상품, 자본재 그리고 보험 상품과 같은 것이 거래되는 고급시장(socially contrived market)까지 여러 단계의 시장이 있다.¹⁸⁾ 조선조에서는 원시적 시장조차 국내시장에 국한되어 있었고 난전계급은 뇌물 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대외거래를 밀무역을 통해서라도 확대시켜갈 용기와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조선조에서는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어있지 않아서 지켜야 할 이익이 (영국처럼)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있지 않았고 또 장애가 있을 때에는, 영국의 신흥세력이 힘으로 마그나 카르타를 쟁취했듯이, 그것을 힘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그럴 힘이 없었다는 데 크게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봉당정치가 영국보다 100여년이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이유는 영국과는 다르게 당시 조선조에는 봉당이 대변할 이익집단이 정치집단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조에서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할 잠재력이 있었던 상인계급은 난전, 보부상 등의 형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노예제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나마 개혁을 주창했던 실학파도 권력에서 멀어진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므로 정치경제개혁 논의는 권력을 잡기 위한 공리공론(예: 예송(禮訟)논쟁)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조의 생활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지면서 정치세력간의 충돌강도는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사색당파 싸움의 성격은 권력=부(富)라는 공식을 더욱 더 확실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3. 외부충격이라는 결정적 전기에 대한 조선조와 일본의 반응 차이

1853년 페리(Commodore Matthew Perry)제독이 4척의 전함을 이끌고 에도 만(灣)에 침입하여 개항을 요구했을 때, 쇼군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던 사쓰마 번주(藩主) 같은 사람들은 경제적 후진성이 군사적 후진성을 불가피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다고 믿었다. 이들은 일본의 개혁을 위해서는 막부 타도가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결국 명치유신을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다.¹⁹⁾

결정적 전기(轉機: critical juncture)라는 개념은 위에서 이미 노예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한 일이 있지만, 여기서도 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7세기 이전에는 서로 비슷한 발전 단계에 있었던 영국, 프랑스, 스페인 3개국이 대서양무역이 열린 후 서로 다른 발전방향을 보인 것은 작은 제도적 차이(small difference)와 결정적 전기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²⁰⁾

아첸오울루 교수 팀에 의하면 일단 결정적 전기가 발생하면 그 당시에 존재하는 제도상의 작은 차이가 그 후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처음에는 작지만, 자꾸 축적되면서 제도적 부동(浮動: institutional drift)과정을 만들어낸다. 생물(유기체)의 경우 두 개의 독립된 모집단(population)이 유전적 부동(genetic drift)과정을 통해 서서히 서로 달라지듯이, 비슷한 두 개의 사회도 제도적 부동을 통해 서서히 제도적으로 서로로부터 더 달라진다. 그런데 유전적 부동(遺傳的 浮動: genetic drift)과 제도적 부동(institutional drift)에서는 미리 정해져 있는 길도 없고 반듯이 축적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제도적 부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차이는, 결정적 전기가 일어나는 동안에 경제적 또는 정치적 환경변화에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전 세계를 통해서 경제발전의 결과가 서로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결정적 전기와 제도적 부동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는 것이 아첸오울루 교수 팀의 주장이다.²¹⁾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1853년 미국의 페리제독이 개항을 요구했을 때 이 사건이 일본에게는 결정적 전기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명치유신이라는 커다란 정치개혁이 일어나 1869년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내 거주 이전과 무역거래의 제한을 철폐하고 사유재산제도도 도입하였다.²²⁾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근본적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와 비교되는 중국(淸)의 결정적 전기는 1839년의 아편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의 정치경제제도는 이로 인해 거의 변한 것이 없었고 (변할 수가 없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청(淸) 체제를 지키려다가 여러 번 민란을 겪은 후 멸망하고

말았다.

일본도 에도(江戸)에서 통치하던 쇼군은 17세기부터 해외무역을 독점하였고 외국인의 출입을 금했었으며, 정치경제제도도 착취적이었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가난했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예제도는 폐지된 지 오래되었고 또 일본 안에는 아시아 및 유럽과 무역거래를 하기 원했던 사쓰만 번주(藩主) 같은 독립된 세력이 여럿 있었다. 이들은 자기들 군대를 보내 쇼군을 칠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독립되어 있었고 힘도 있었다.

일본에서 명치유신(1868. 1. 3.)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조선조보다는 권력이 다원화(多元化)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어떤 학자는 일본의 이런 지방분권 또는 봉건적 권력분산을 중앙집권적인 중국보다 먼저 근대화될 수 있었던 조건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외에도 일본은 일본의 태평양 쪽 연안에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연안으로 흐르는 해류의 덕도 많이 보았다. 즉 어린나이에 일본 연안에서 폭풍우로 파선된 배에 실려서 캘리포니아 연안에 도달하여 요행히도 구조된 후 미국의 발전된 경제를 보고 돌아온 일본어부들이 여럿 있었고 이들이 선진화된 미국문화를 전할 수 있었다는 행운도 중요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대원군이 주도한 조선은 일본의 명치유신 3년 전인 1866년에 병인양요를 당하고 그 5년 후에는 신미양요를 당했는데도 그에 대한 대응은 청나라의 아편전쟁 후의 대응과 거의 비슷하게 아무런 가시적 개혁을 단행할 수가 없었다. 우리에게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결정적 전기였으나 당시 우리나라 상황은 청과 똑 같이 제도개혁을 선도할 세력이 없었다. 흥선대원군을 정점으로 한 당시 권력실세들은 대외개방으로 인한 국내정치질서의 파괴, 그로 인한 자기들의 권력상실을 더 두려워하여 쇄국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순신과 권율 등이 쿠데타를 하지 못한 것, 신흥 상인계급이 등장하지 못한 것 그리고 노비제도가 조선조 말까지 지속된 것이 아쉬운 것이다. 영국에서 1381년 농민폭동 이후 정치권력이 왕에게서 귀족으로 그리고 엘리트 계층에서 국민으로 계속 넘어갔다는 점에서 보면 조선조 말기에라도 노비폭동이 일어났었다면 우리나라 역사의 진로는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못했더라도 효종 4년(1653)에 일본 나가사키로 가다가 배가 난파하여 우리나라로 (구조되어) 들어온 하멜(Hamel) 일당을 잘 활용했었다면 잘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효종은 청(淸)을 정벌할 의욕도 강했었으므로 하멜을 이용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를 크게 이용하지 못한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선조와 청나라처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었다. 이들 나라의 권력층이 산업화를 반대한 것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로 잃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절대군주와 귀족들은 경제성장이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더 좋은 기계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부되어 사회변혁이 일어나 기존사회체제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혐오스러웠고 또 위협하게 느껴졌던 것이다.²³⁾

4. 일제시대

일제강점기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은 조선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일본학자들과 우리나라 학자들 중 일부는 일본의 식민통치가 우리나라가 근대화하는데 기초가 되었다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 내지 지지하고 있으나²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한 이후 취한 조치들을 돌아보면 이런 주장은 근거가 지극히 빈약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식민정책을 좀 더 자세히 보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가 공식적으로 망하기 훨씬 전부터였다. 즉 일본은 미 페리 제독의 자기들(막부)에 대한 개항 요구(1853) 방식을 모방하여, 1875년 조선의 문호개방을 위해 전함 운양호를 강화도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조선조 수비대를 무찌르고 문호개방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1876년 강화도조약이 굴욕적으로 체결되고 인천항이 개항되었다.

이 후의 개방은 더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1883년에는 인천항이 일본에 개방되었고 서울은 1882년 체결된 조일수호조약 속약(續約)에 규정된 “자금(自今: 동 속약 체결시점) 1년 후를 기하여 양화진(楊花津)을 개시장(開市場)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서울이 일본에 개방되었다. 그 후는 개시장을 용산으로 옮겼으나 일본인들이 즐겨 모여든 곳은 남산기슭의 “진 고개”(지금의 충무로 일대)였다.²⁵⁾

강화도 조약 체결이후 일본의 후원으로 조직된 신식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에 불만을 품었던 훈련도감 소속의 구식군인들이 1882년 일으킨 임오군란으로 조선조정은 청국의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 이에 1884년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 인사들이 청(淸)국의 강해진 영향력과 이에 안주하고 있는 척신(戚臣)들을 제거하고 조선을 근대화하려는 의도로 일본군에 의존하여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이것이 실패하면서 청국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1893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의 발발을 계기로 일본과 청국이 1894년 군사적으로 충돌하게 된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자 사태는 반전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은 자기들의 야망을 달성하는데 유리하도록 조선조를 개조하려 하였다. 일본은 임오군란 직후부터 조선에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수법은 영국의 경험을 모방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당시 주한공사였던 이노우에가 본국에 보낸 문서에서 “영국이 애급(埃及: 이집트)에 대해 십 분의 간섭을 할 수 있는 구실은 자본을 투하하여 실리적 관계에서 그 지보(地步: 입장)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데서도 알 수 있다.²⁶⁾ 참고로 말하면, 영국은 18세기말경 이집트를 나폴레옹으로부터 인수한 후 이 나라에 차관을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집트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이집트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본의 차관은 청일전쟁 이후 본격화되었다.²⁷⁾ 일본은 차관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1905년 일본이 파견한 재정고문의 주도로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국내에 금융공황(錢慌)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1880년대부터 겨우 일어서기 시작한 민족자본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후에도 일본의 차관제공은 계속되었다.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에는 이런 차관제공이 일본의 경제침략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국민들은 이에 저항하기 위해 1907년 처음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제 통감부가 보상운동 책임자를 모금횡령이라는 죄명으로 구금함으로써 이 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음은 주지되는 일이다.

청일전쟁 후 우리나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일본의 대자본은 영토침략정책의 일환으로 토지수매에 열을 올렸는데, 그 이전에 이미 농업이민형태로 일인들이 대거 유입되어 미국의 대일본수출을 주도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대거 만주로 이민을 간 것도 일본의 이런 탄압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때문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민족계 기업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한일합방 후인 1910년 일본은 소위 조선 회사령(會社令)에 의거 우리 민족계 기업은 설립과 해산을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만들어 그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그 의도는 물론 한국을 영원한 일본의 원료 공급지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일본의 식민정책이 3.1운동을 계기로 변화를 보게 된 점은 묘하게도 영국이 1857년 힌두 병사들의 반란(Indian Mutiny)을 잔인하게 진압한 이후 식민정책을 바꾼 것을 연상시킨다.²⁸⁾ 다만 영국이 그 이전에는 동인도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치해오던 것을 영국정부의 직접통치, 그것도 무단정치를 하게 된 것에 반해²⁹⁾ 일본은 유화적 (그 이전에 비해 그렇다는 의미) 식민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점이 다르다. 일본이 이렇게 유화적이 된 배경에는 일본의 내부사정 즉 일본 내 경기불황 타개, 중국침략 야욕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임진왜란 때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을 침략할 의도가 있었음은 주지되는 일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승국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일본은 다시 한 번 대제국을 건설할 꿈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런 일본이 대제국을 건설하려는 독일의 히틀러와 손을 잡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인도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대영제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대제국을 유럽을 중심으로 건설하려했던 히틀러와 손을 잡고, 아시아에서 대제국 소위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려는 목표를 세운 일본에게는 조선과 조선인민의 이용가치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남쪽은 농업, 북쪽은 공업이라는 기형적 경제구조를 갖게 된 것도 일본의 팽창정책 즉 제국주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나마 있었던 공업부문의 자본과 생산시설의 90% 이상이 일본산업과의 보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말로 도와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는 일본 군국주의의 도구였으며 위안부, 탄광노동자, 군인의 공급처에 불과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식민통치가 우리나라가 근대화하는데 토대가 되었다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1910년-1940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3.7%로 성장한 것30)을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추정이 얼마나 정확한가도 문제이고 또 일본이 제국건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생산능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우리나라의 “식민지근대화론”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스페인이 아즈텍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곳 사람들을 거의 모두 노예로 삼았지만 아즈텍 왕국 때보다는 지금의 멕시코 원주민의 생활수준이 나을 것인데 여기에 “식민지근대화론”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일본은 제국건설이 목적이었으므로, 이들은 자기네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그들의 본의(本意)와는 다르게 촉진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측면이 강하다. 즉 첫째로 그들은 우리나라 토지를 약탈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지만, 이를 위해 토지를 측량하고 관련된 제도를 개선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사유재산제도를 확립시켜주었다. 둘째로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를 탄압한 것도 자기들의 제국(帝國) 건설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해방 후 우리나라 특히 남한에서 공산세력을 최소로 억제하여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어떤 외국학자와 국내학자 중 일부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원인을 일제하의 식민지시대에서 찾고 있다.³¹⁾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북한에서의 경제발전이 왜 지지부진했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다. 식민지시대에는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북한이 지금은 남한보다 낙후된 것은 정치경제제도의 차이가 아니면 충분히 설명할 길이 없다.

울슨에 의하면 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나라가 안정되어있는 기간이 짧으면 그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한다.³²⁾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은 일본의 침략과 6.25.전쟁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울슨에게는 다른 시각도 있다. 즉 저개발 국가는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이 높다는 캐치업(catch-up) 이론이 그것이다.³³⁾ 이 캐치업 이론이 식민지개발론보다는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더 잘 설명하여준다고 할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일본의 식민지배 덕분에 우리나라에 교육열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설득력은 약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점도 일본의 본의 아닌 기여(우리 민족의 일제치욕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을 피해 중립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면 일제치하에서보다 더 크게 발전했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일본의 관동대지진, 제2차 대전 중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대가로 쳐도 너무 작기 때문이다.

5. <별장(別章)>: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뿐 아니라 정치제도 앞에서도 평등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왕은 신(神)이 준 신권(神權: divine right)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개념에서 법치주의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왕이 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

각하게 되면 왕을 포함한 지배계급도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자기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그것은 법체계의 공평성과 보편성(equity and universality)에 입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리에 따르면 권력투쟁도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의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18세기 초에 이미 영국은 누구도 “룰에 따른 경쟁(games of rule)”을 버릴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당시 휘그당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들이 만약 “룰에 따른 경쟁”을 버리면 자기들이 지키려는 제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었다. 즉 제도가 불안정하게 되면 권력을 한번 잡은 집단은 비록 그 집단의 일부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도 그들이 장기집권을 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다른 세력들에게 주게 됨으로, 그럴 바에는 왕정을 복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왕정복귀 지지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왕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휘그당 요원이나 의회 의원들은 자기들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도 법원이 자기들에 저항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블랙 법(The Black Act)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강제하지도 못했고,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뒤집지도 못했던 것이다.³⁴⁾

권력을 잡고 있었던 휘그당이 이렇게 자제(自制)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분위기가 영국에서 명예혁명 후 포용적(inclusive)인 체제가 더 포용적인 체제로 발전하는 선순환(virtuous circle)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런 선순환에서 당시의 언론(media)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명예혁명 후 영국은 언론을 통제할 일이 없었다는 사실도 우리로서는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4.19.혁명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이런 법치주의 확대에 우리 언론의 역할이 컸음은 주지되는 일이다.

즉 법치주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절대왕정에 저항해서 달성한 명예혁명의 부산물이며 명예혁명에 참여했던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도 한 그룹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지배자의 권한도 한계가 있다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뒤에 설명하는 다원주의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다.

조선조에서는 고종을 중심으로 한 대원군과 민비의 싸움이 조선조가 패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조선조는 끝날 때까지 절대왕정을 중심으로 한 정치투쟁이 있으며 신흥 상인 등과 같은 경제발전을 주도할 계층과는 무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선조에서는 망할 때까지 권력자의 권한을 제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따라서 법치주의의 싹이 틀 여지가 없었다.

제3장 해방에서 4.19.혁명까지

1. 머리말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1948년 UN한국위원회 의장인 메논 인도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황폐 상황을 보고 했다는 말이다. 인도처럼 가난한 나라의 대표가 1948년의 우리나라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면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인도인이 보기에도 처참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인도인이 자랑하는 민주주의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니 대단한 기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해방직후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은 메논 인도대표가 느낀 이상으로 처참했다. 해방 당시 제조업 부문의 94%가 일본자본으로 운영되는 것이었고 기술자의 80%가 일본인이었다. 따라서 해방과 더불어 제조업생산은 거의 제로수준으로 격감될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3년째인 1948년을 기준으로 보면 기업체수는 1941년에 비해 60%, 고용자수는 70%, 생산액은 83%가 감소하였다.

여기에 남북분단으로 남한에 남겨진 중화학공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20%에 지나지 않았고 전 공업 생산액 기준으로는 40%에 불과했다. 남한의 전력은 북한의 8%, 철광생산은 1.1%, 석탄생산은 0.3%에 불과했다.

물가도 많이 올라갔다. 소비자 물가는 1945-46년 사이에 10배가 뛰었고 도매물가는 28배가 올랐다. 고용사정도 지극히 나빠졌다. 1944년에 고용되어있던 사람 중 절반만이 1947년 중에도 취업상태에 있었으나 임금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1950년까지 11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으로부터 복귀하였고, 50만 명 이상이 해방되던 해인 1945년 중에 남한으로 피난을 왔고 그 후에도 매일 4천명의 피난민이 남한으로 왔다.1)

이런 상황에서 범죄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물을 만난 고기”에 비유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착취가 없고 계급이 없으며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을 유혹하였다. “종로 한복판에 있는 화산백화점(지금 국세청 자리) 건물 옆에 붉은 깃발을 휘날”렸고 “거리마다 ‘인민공화국’의 내각명단”이 벽보로 붙어있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당시 사회현실을 꽤 뚫어 보고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가 미군상륙 이틀 전인 9월 7일 인민공화국”을 탄생시켰다.2) 그렇지만 한민당 간부를 중심으로 한 우익의 대다수는 시위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들은 공산주의 이론에 맞설 이론도 없었고 “지주를 기생충”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에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다. 1946년 7월 미군정 정보국은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중도가 50%를 넘고 좌익이 12%, 우익이 30%로 나타났으나 중도의 상당수가 좌익이라고 미군정은 판단했다.3)

이렇게 실물경제는 마비상태에 빠져있었고 정치 분야는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익에 극도로 불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경제가 빛을 보게 된 것은 미국에 대한 우

리 국민의 신뢰가 너무도 두터웠고 그에 따라 우리 국민이 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였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거의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때문이었다. 미국에 대한 이런 신뢰는 이승만이 그 동안 미국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도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신뢰의 정도는 박헌영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가 북한에 가서 반미투쟁 강화를 강요당할 때마다 그는 “남한의 인민들이 보는 미국은 이북 측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침략자가 아니고 해방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심한 반미투쟁을 전개하면 당(黨)은 고립되고 만다.”고 주장했다고 한다.4) 당시 좌익의 우두머리인 박헌영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는 대단했었다.

미국과 미국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런 높은 신뢰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발전하는데 절대적인 기초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사태발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잘못되어가다가도, 예컨대 여러 번의 개헌파동, 6.25.전쟁, 3.15.부정선거 등이 있었어도, 우리국민 대다수가 자유민주주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굳건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3.15. 부정선거가 4.19.로 이어진 것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었던 이승만이, 노망한 때문이기는 했겠지만, 反자유민주주의적인 3.15.부정선거가 용인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몰랐거나 편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선거가 독재체제가 아니라 4.19.혁명으로 이어진 것은 이때 이미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자유민주주의를 어림 쫓 하거나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1949년에 실시된 농지개혁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개혁 당시에는 이승만을 지지했던 지주계급들의 저항이 심각했지만, 6.25.전쟁이 북한의 승리로 끝나지 않게 만든 공로의 큰 부분을 농지개혁으로 돌려야 한다는 우파학자들의 해석은 억지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남한 사람들이 6.25.전쟁 중 북한 점령군이 자행한 잔인한 공산주의적 정책 특히 남한에서 계급혁명을 완수하려는 무지막지한 행동들을 체험한 후 공산주의에 대한 막연한 애정조차 상실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4.19.혁명 중에 “미군 철수” “김일성 만세” “장[면] 내각 사퇴” 등을 외치는 광란적인 데모가 실제로 있었지만 이런 데모가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 것은5) 이런 뼈저린 경험도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2. 6.25.전쟁의 빛과 그림자

6.25.전쟁은 인도대표 메논이 본 대로 이미 처참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 경제를 더 처참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지금 이를 되돌아보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 일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조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양반과 상인(常人)의 차별과 같은 우리나라의 구습들과 일제잔재가 거의 완전히 타파되었고, 일제 때부터 혜택을 받아왔던 이익집단들도 완전히 해체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식민통치에 도움이 되는 시골토호들을 보호했었는데, 6.25.전쟁 때는 이들도 고향을 버리고 부산까지 피란을 가지 않을 수 없었고, 부산까지 가는 동안, 그리고 부산에서 먹고살기 위해 과거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들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동분서주했던 일을 들 수 있다. 조선조 박제가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상업, “장사꾼” 등을 경멸하는 전통이 이어져왔었는데 그것이 6.25.전쟁 중에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다.

둘째로 남한에서 6.25.전쟁 이전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힘이 더 강했던 공산주의 세력이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약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북한 동포들이 미군의 후퇴를 따라 대거 남하한 점, 찬성은 백색투표함에 그리고 반대는 흑색투표함에 넣는 괴이한 선거 방법, 농사와 관련된 현물세(現物稅)의 잔인한 징수방식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국시를 반공(反共)”이라고 주장해도 반대할 사람이 없게 되었으며, 그 후 경제개발 기간 중 공산주의 또는 그 추종세력이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걸림돌을 놓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셋째로는 인구가 대거 도시로 집중되어 그 후의 우리 경제발전에 추진력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6.25.전쟁 중 130여 만 명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란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도시로 몰렸고, 이때부터 시장을 중심으로 남한에서는 “누구나 재주껏, 운수껏 뛰면 하루아침에 지위가 바뀌는 사회변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절박한 환경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상황으로 몰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진취성, 적극성, 성취동기를 갖게 되고 --- 더 나아가[서는] 갑자기 [거부가 되는] 사람도 나오게 되었다.”6) 우리나라 국민은 6.25.전쟁전만해도 게으른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 사람들이 9.28.수복 이후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 “빨리 빨리”를 왜치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현상을 케인즈와 애컬로프(George A. Akerlof) 등 서양 경제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애니멀 스피리트(animal spirit)”가 만개(滿開)하였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7) 이렇게 발전한 애니멀 스피리트는 그 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급의식(class consciousness)의 타파가 유럽 여러 나라들의 성장을 촉진시켰다는 올슨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6.25.전쟁으로 인한 반상(班常)의식의 철저한 소멸이 그 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8)

넷째로 미국 원조의 대부분이 소비재였기 때문에 그에 힘입어 소비산업이 일어나게 된 점이다. 그 중에서도 밀가루, 설탕, 시멘트와 방직 산업이 당시 한국산업의 4대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것이 삼성, 현대 및 럭키그룹 등이었다. 즉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재벌의 맹아(萌芽)가 나타난 것이다.

끝으로 군대의 힘이 커졌다는 점이다. 6.25.가 없었다면 군대가 커질 수가 없었고, 군대가 커지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발전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5.16. 군사혁명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9)

3. “과두정치의 철칙(the iron law of oligarchy)”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들

1820년대 이후 일어난, 멕시코의 독립전쟁은 토착민을 착취하고 백인의 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말하자면 백인과 토착민의 불평등한 나라(“the country of inequality”)를 지키는 것이 독립의 목표였다.10) 이렇게 착취형 제도를 안고 독립을 쟁취한 멕시코는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착취형 제도 밑에서도 일시적으로는 번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기간 중 세계경제도 동시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권층이 스스로 개혁해서 포용형 제도를 채택해야 계속 더 발전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구(舊)제도를 지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들은 자기들 눈앞의 이익을 버릴 수 없었고 따라서 미국처럼 사회 전체를 바꾸는 개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11)

또 다른 예를 들면, 1960년대 중반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였다. 독립 후 이들 나라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영국이 식민지를 경영할 때 만들어 놓은 착취형 제도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너무 좋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말하자면 독립은 (독립운동을 했던) 기존 정치엘리트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쿠데타나 마찬가지로였다.12) 즉 그들이 독립과 더불어 인수한 착취형 제도는 그들 이외에는 누구도 그들의 착취행위에 제약을 가할 수 없는 권력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 때문에 권력을 잡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간의 소득불균형은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독립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정치지도자들 간의 정치게임이 점차 목숨을 거는 게임으로 변해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위험이 있었다. 해방과 더불어 일본인들이 놓고 간 가옥과 재산에 “접수”라는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독립운동단체들이 많았다.13) 미국이 진주(進駐)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단체를 빙자해서 이런 일을 하고 다녔다. 일제 때 힘을 썼던 계층도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승만과 김구 등 훌륭한 지도자들이 들어와 있었지만,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우리나라도 19세기의 멕시코나 영국에서 독립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처럼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과 토착세력이 야합하거나 서로 대립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껏 걸어온 길과 다른 길을 걸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승만으로서는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좌파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일제하에서 일했던 관료들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승만의 행위가 부득이 한 것이었다고 보아도 이 때문에 북한으로 넘어간 일본 유학과 엘리트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이승만의 휘하세력도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가옥(家屋) 등 적산(敵産)과 같은 경제적 이권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군의 영향력이 크기는 했지만 미국이 모든 작은 사건에 개입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미군들이라고 너물을 싫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볼 때, 우리 국민의 미군에 대한 신뢰는 엄청났지만 그들의 한국주둔만으로는 우리나라에 “변영하는 민주주의”를 반듯이 보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필리핀의 예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제2차 대전 후 식민지들이, 해방 또는 독립 후에, 식민지시대보다 더 심한 착취형으로 바뀌는 현상을 미첼스(Robert Michels)는 과두정치의 철칙(the iron law of oligarchy)이라고 불렀다.14) 해방 후 북한은 독재화되었으므로 이 법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고 남한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승만이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후 우리나라가 겪은 것을 보면 남한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다원주의(多元主義: pluralism)적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는 이 철칙에 가까이 갔다 멀어져갔다 하기를 반복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4.19.혁명까지의 기간 동안에 우리 정치계가 그렇게 요동친 것은 좌우로 양극화되어 있던 독립운동세력, 미국 유학과, 일본 유학과, 살아남고자 하는 일제 특혜 수혜계층들 간의 합종연횡과 이들이 해방 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소위 적산(敵産)의 분배문제 앞에서의 암투 등으로 볼 때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다원주의(pluralism):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과정(process of empowering)

해방 후 4.19.까지의 기간에는 권력계파간의 극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투쟁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언제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넓혀주는 데 기여한,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다원주의(多元主義)적 싹이 틀 수 있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국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영국에서는 1670년대에 주로 부(富)의 축적으로 (정치적) 힘을 얻게 된(empowered)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즉 지방소농, 제조업자 및 대서양 무역업자 등이 명예혁명의 중심세력인 휘그(Whig)당 창설에 힘을 보탰고 명예혁명 이후에 생긴 다원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15)

여기서 다원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권력이 절대왕정 하(下)의 왕이 아니라 사회 각층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의 밑바탕에는 도덕적 다원주의(moral pluralism) 즉 개인은 각자 인생의 의미, 신(神)의 존재, 행복추구방법 등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16)

미국이 대표적인 다원주의적 사회이다. 이런 사회는 서로 다른 종족을 하나로 만드는 용광로(melting pot)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종족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그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정치적 의견이 서로 다른 여러 그룹이 존재하게 되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엄격히 구별하는 엘리트 사회(elitist society)와도 구별되게 된다.

다원주의적 정치제도는 권력이 한사람 또는 하나의 엘리트 그룹으로 집중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다원주의는 법치주의 원칙을 높이 평가한다.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뿐 아니라 정치제도 앞에서도 평등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주도했던 휘그(Whig)당은 상인과 공장주 같은 신흥 경제세력을 대변하기 위해 결성되어 1714-1760년 동안 의회를 지배했는데, 이들도 다른 권력 엘리트처럼 자기들의 새로운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은 또 가능했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것은 휘그당에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토리(Tory)당이 있었고 그때까지 절대군주정과 싸우면서 만들어 놓은 의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제도들에 의해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휘그당에 저항한 평민들도 있었다. 이들은 얼굴을 검게 칠하고 밤중에 휘그당 유력자의 영지(領地)에 사는 사슴을 죽이거나 시설물을 파괴했다. 이들을 블랙(Black)이라 불렀고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 즉 블랙 법(The Black Act)이 1723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싼 사건들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법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크게 기여했다.¹⁷⁾

해방이 되면서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좌우로 갈라져 싸웠는데, 이 시기의 투쟁은 정치 엘리트 간의 투쟁이었을 것이다. 여운형 등이 해방과 더불어 처음에는 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세웠고, 미군이 상륙하기 이틀 전인 1945년 9월 7일에는 이를 해체하고 국호를 인민공화국으로 정하였으나 이런 것들은 모두 좌파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미군정이 불법화할 때까지 국내우파를 포함한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좌파 중심의 정치엘리트만의 활동이 미군정에 의해 불법화되지 않았더라면 그 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에서 미, 영, 소련 등 3개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 신탁통치가 합의되었다. 더 다행스러운 것은 처음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파가 신탁통치에 반대했었는데, 좌익들이 1946년 1월 소련의 지령을 받고 찬탁(讚託)으로 태도를 바꾸었다는 사실이다. 그 후 반탁(反託)데모는 주로 남한에서 찬탁데모는 주로 북한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반(反)좌파의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¹⁸⁾

이후 국민들의 정치참여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대되어갔다. 6.25.전쟁이 이런 추세에 힘을 보탠 것은 물론이다. 6.25.전쟁 자체가 옛날부터 보이지 않게 내려왔던 반상(班常)차별을 확실하게 제거해주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더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고, 6.25.전쟁이 진행 중인 기간 중에도 여러 번의 헌법 개정으로 인한 정치과동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자극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개정과 관련된 정치과동은 권력을 잡고 있던 세력과 권력을 빼앗고자 하는 세력 간의 투쟁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워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ungovernability)에 이르렀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52년에 행해진 소위 “발취개헌”때가 좋은 예이다. 6.25.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대통령을 계속해야 국난(國難)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터인데 (그것이 상식에도 맞고) 야당은 이승만이 독재를 하려고 한다고 반대했다면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영훈 교수는 발취개헌 이후를 독단 또는 권위주의시대로 보고 있는데,19) 이런 시각에서 보면 그 이전은 누구도 독재시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여러 형태의 투쟁으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더 높아졌을 것이다. 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정치체도를 없애려 한 집단이 없었다는 점, 여러 개의 정당이 있어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울 정도로 정치적 경쟁이 심했다는 점도 포용형 정치체도를 발전시킬 가능성은 높였다고 할 수 있다.20)

그 후에는 휴전반대를 외치는 관제(官制) 데모가 뒤를 이었는데, 이 관제데모도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높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국민들의 정치참여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것을 무시한 당시 일부집권층이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3.15 부정선거가 발각되었고 이것이 집권층의 장기집권에 대한 불만과 연결되면서 4.19.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엘리트층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은연중에 (정치적) 힘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려 왔고(empowering) 그리고 그에 따라 정치체도는 다원주의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뒤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그 동안 쌓였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오래 지속되면서 누구든 장기집권은 안 된다는 생각이 국민들 마음속에 새겨졌던 것이 아닐까?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empowerment) 프로세스와 그 뒤를 이어 포용형 정치체도의 발달을 촉진하는 요소로 아첵오울루 교수 팀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제시했다.21) 첫째로 나라 안에 어느 정도의 중앙집권화 된 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서 기존체제에 대한 저항이 생겨도 그로 인해 국내질서가 즉시 무법상태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방 후 4.19.혁명 때까지의 기간 중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건들은 여러 개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수반란사건에 이은 제주도의 소위 4.3.사태라고 할 수 있다.

4.3.사태는 건국을 위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인 5.10.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북한의 공작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 당원들인 김달삼 등 360여명이 무장봉기한 것을 지칭하는 말이 4.3.사태이다. 이 반란은 6.25.전쟁이 끝난 후에도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 1954년 9월 21일에서야 종결된 큰 사건이었으나, 이 기간 중에 남한은 북한과 전면전을 하는 데 큰 지장을 받지 않는 않았다. 이 사건의 종결과정만 보아도 남한은 대단히 중앙집권화 된 안정된 질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조에서는 망할 때까지 유교사상에 입각한 절대왕권이 흔들린 일이 없었고 그에 감히 대항할 생각을 가져본 사람조차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순신과 권율이 쿠데타를 생각해 본 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과 조선조 말에는 대원군과 민비의 싸움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원시적 형태의 법치주의 즉 법가(法家)사상이 진나라 때에 이미 있었고 진(秦)은 이것에 힘입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중국의 영향을 뼈저리게 받아온 조선조에서 그리

고 청나라까지 다녀와서 청나라의 문물제도를 그렇게 칭송하였던 실학과 학자 중 누구도 법치주의와 유사한 제도인 법가(法家)적인 법치주의조차 생각해본 사람이 없었다. 중국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제4장 4.19.혁명에서 대통령 직선제까지

1. 아첸오울루 교수 팀의 한국에 대한 평가

아첸오울루 교수 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25.전쟁기간 중 국가기반이 확립되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에 의해 세워졌으며, 그는 1948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아첸오울루 교수팀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승만이 독재적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아첸오울루 교수 팀은 남한정부를 독재국가로 보았지만, 남북한 간의 경제발전상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포용형 경제제도(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했다. 그에 의하면 이 제도는 미국과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각자 자기능력에 어울리는 경제부문에 참여하여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개인이 각자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어떻게 남한이 이런 포용형 경제제도를 갖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열쇠는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원주의적 정치체도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제주도 4.3.사태의 해결과정과 6.25.전쟁 중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충분히 질서가 잡혀있었고, 국가권력이 국내 모든 곳에 미칠 정도로 중앙집권화 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므로 남한에서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박정희의 교육배경, 집안내력과 군인으로 있을 때의 행적으로 볼 때 그가 이승만과 같은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승만의 정책을 승계하였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성공적 기업들에게는 대출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퍼부었다.1)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산업화된 것이 착취형 정치제도 아래에서 포용형 경제제도를 채택한 때문이며 그것은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밑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아첸오울루 교수 팀은 주장하고 있다.2) 그러나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제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었던 나라들은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독일, 일본,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이므로 이들 나라에는 미국의 영향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련과는 다르게 한국은 1980년대에 착취형 정치제도에서 포용형으로 바뀌었다고 아첸오울루 교수 팀은 말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전두환 말기의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그 이후 노태우 시대의 사태발전을 말하는 듯하나, 대통령직선제는 이승만 시대에도 있었고 1987년 개헌 당시에도 다원주의의 지지자들이 이미 중요한 정치세력으로서 힘을 쓰고 있었음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다.

아첸오울루 교수 팀도 한국이 1970년대에 이미 경제제도가 충분히 포용형으로 바뀌어서, 엘리트 권력층이 정치의 군사적 지배로부터 얻을 이익 즉 착취형 정치제도를 유지해야 할 요인이 거의 없어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상대적 평등화로 인해 엘리트 권력층이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강화로 인해 권력의 상실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적어졌음도 인정하고 있다.3) 이런 환경 때문에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군인들도 (내부적으로는) 서로 갈라져 있었겠지만, 이들이 조선조의 4색 당파처럼 극렬히 싸울 이유는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심각한 전화(戰禍)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다원주의적인 제도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된 데에는 “1959년까지 학령아동의 96%가 취학하는 성과를 올린” 의무교육제도가 큰 기여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해방 당시 문맹률이 86%였던 것이 1959년에는 15.5%-22.1%로 감소한 것도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크게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

전두환 이후의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전두환이 쿠데타를 했지만, 노태우 때의 정치개혁은 그 이후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발전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은 고르바초프 이후의 소련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현상이다.5) 그리고 이런 현상은 미국의 영향력이 강했고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더 오래 지속된 필리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현상이다.

2. 5.16. 군사쿠데타는 박정희 독재체제를 낳았는가?

1960년 5월 16일 새벽에 단행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은 4.19.혁명 이후 야기된 극도의 정치적 불안사태였다. “4.19. 이후 무려 1,836회의 데모가 일어났고 1960년 10월 11일에는 4.19.부상학생이라고 자처하는 젊은이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장면 정부는 이런 사태를 수습하려고 ‘데모규제법’, ‘반공임시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었다.

그러나 혁신계 정당들이 1961년 3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2대악법성토대회’를 연 후 장

면 총리 사택으로 물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남북회담’ ‘김일성 만세’ ‘장 내각 퇴진’ ‘미군 철수’ 등을 외치면서 장 총리 자택 근처에서 밤늦게까지 극단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 데모는 데모가 아니라 “일종의 광란(狂亂)”이었다는 것이다. 데모를 저지하는 경찰도 없었고 구경꾼도 없었고, 오직 윤보선 대통령과 그의 비서만이 그 광란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6)

그 후 이런 무정부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에 5.16.군사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인들이 나라의 중대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공백(통치가 불가능한 상태 즉 ungovernability)을 군인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혁명군은 5월 16일 새벽 3시 KBS 방송을 통해 6개항으로 된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6개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당시 세계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갈라져 있었고, 남한은 6.25.전쟁 때 공산주의 북한과 싸웠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당시 많은 국민들이 안도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둘째로 중요한 조항은 기아(飢餓)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하는 등 “혁명과업”을 완수한 후에는 원대로 복귀한다고 서약한 것도 국민들을 많이 안심시켰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공약을 발표한 혁명군의 순수성에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혁명공약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았다는 사실은 혁명은 했지만 이승만 이후 지켜져 온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혁명군은 쿠데타 직후 3,000여명을 검거했다가 최종적으로는 614명을 의법 조치했다.7)

학생층 내에서도 5.16.군사혁명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5.16.혁명 직후 서울대학생회는 “4.19.와 5.16.은 동일한 목표”라는 지지성명을 발표했고, 4.19.혁명에 참여했던 상당수의 학생들이 “체제 참여적 사회진출을 통해 4.19.혁명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 또는 “5.16.은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학생들은 1964년 3월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할 때까지는 군사정권과 타협하려는 움직임이 강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8)

물론 혁명군이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면상으로는, 자기들의 속마음과 다른 발표와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혁명공약 발표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혁명공약은 6.25.전쟁 중에 습득하여 이제 잠재의식처럼 된 “애니멀 스피릿”을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혁명군의 속마음과 다를지 모른다는 의심을 했어도 국민들은 그것을 믿고 싶었을 것이다. 이것은 같은 해 실시된 대통령선거(투표율 85%)에서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15만 표차 이상으로 승리한 것으로도 증명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9)

위에서 본 바와 같이, 6.25.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누구나 재주껏 뛰다가 혹시 운수가 좋으면 하루아침에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6.25.전쟁과 같은 절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쟁에서만 아니라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자신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진취성, 적극성, 성취동기 등을 갖게 된다. 그런데 혁명공약은 이런 분위기를 촉진하면 했지 북한의 공산혁명처럼 모든 것을 뒤집을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실제 운영체제는 많은 국내외학자들이 박정희 독재체제라고 부르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들 학자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도 립셀(Seymour Martin Lipset)의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마음에 편하기도 했을 것이다. 특히 좌파학자들에게는 그러했을 것이다. 박정희 독재정권이 경제성장의 기초를 쌓는 데 기여하였고 그래서 시작된 경제성장 위에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민주화를 신장시켰다고 주장하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국내외학계의 추세와도 맞고 또 소위 “민주화”세력에게도 찬사를 보낼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전두환의 경제개입교수로 알려진 김재익도 “경제가 자율화되고 국제화되면 정치적 폐쇄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시장경제가 성장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따라온다.”고 근대화이론을 지지하는 듯한 말을 했다.10)

아첸오울루 교수 팀도, 우리나라에 관해서는, 이런 근대화이론적인 사관(史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은 이 승만 정권은 물론 군사혁명 이후도 독재체제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6.25.전쟁 중 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기는 했지만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고 이승만은 물론 박정희도 모두 독재적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아첸오울루 교수 팀은 박정희 시대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본 바와 같이, 자기 스스로 이론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근대화이론을 원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그들의 저서 전반을 통해서 립셋의 주장 즉 민주화는 경제성장의 부산물, 다시 말하면 독재가 성장을 가져오고 그 뒤에 민주주의가 온다는 근대화이론이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많은 예를 들어 반박하였으면서도, 그는 박정희 치하의 높은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데는 민주주의적 분위기 즉 포용적 정치제도가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한 포용형 경제제도를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11)

과거 수세기 동안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를 구축해온 나라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나 과거 60-100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해온 독재(獨裁)국가들은 더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착취형 제도를 택하고 있는 독재자들이, 1980년대 이후 중국 공산당처럼, 경제성장이 자기들의 체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믿거나 또는 자기들의 체제가 더 우수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 더욱 더 독재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12) 이런 점에서 볼 때에도 4.19.혁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국민적 저의(底意)를 충실히 받아드려, 민주주의체제를 적어도 겉으로는 유지하면서 장기간 동안 높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박정희 체제는 다른 선진국의 독재체제와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독재자도 어느 정도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을 자극할 수는 있다. 그

러나 이런 착취형 체제 밑에서의 경제성장은 포용형 체제 밑에서의 성장과 성질이 크게 다르다. 즉 착취형 밑에서는 독립 후의 멕시코나 스탈린 치하의 소련처럼 기술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기술에 의존한 성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13) 이런 관점에서 보아도 박정희 정부 하의 경제체제는 무한한 이노베이션 즉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포용형 제도임을 일 수 있다.

박정희 체제가 (독재체제이므로) 정치는 착취형이고 경제만 포용형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르바도스(Barbados)라는 나라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착취형 정치제도 아래에서는 포용형 경제제도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즉 포용형 경제제도는 착취형 정치제도를 지원하지도 못하고 그로부터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포용형 경제제도는 착취형 정치제도 아래에서는 권력을 잡고 있는 엘리트층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착취형 경제제도로 바뀌거나, 이 포용형 제도를 창출하는 경제적 동역학(動力學: economic dynamism)을 통해 착취형 정치제도를 불안하게 만들어 포용형 정치제도로 가는 길을 열거나 한다.14) 박정희 체제가 정치적으로는 착취형에 가깝고 경제제도만 포용형이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해 보였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 4.19. 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아첼오올루 교수팀이 동서고금을 통해 잘못된 것을 증명한 근대화 이론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듯이 보이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헌정사(憲政史) 상으로는 4.19.혁명이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역사적 의미를 지녔음을 모두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것이 되는 이상한 현상부터 생각해보자. 적어도 프랑스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폴레옹 독재를 빼놓을 수 없듯이, 4.19.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16.혁명을 빼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과의 관계 그리고 4.19혁명과 5.16.혁명 간의 관계에서 무언가 유사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혁명 후 몇 십 년 동안 프랑스에는 전쟁과 불안정이 계속되었다. 그런 속에서도 프랑스에서는 소위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이라는 착취형 정치경제제도에서 포용형 정치경제제도로의 이행이 시작되었고 이 개혁운동은 1870년 제3 공화국의 수립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까지 지속되었다. 제3공화국의 수립은 말하자면 프랑스의 명예혁명이었다.15)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것이 전두환 말기의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명예혁명은 이 때 일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이 급진(急進)화되면서 한 때 공포정치가 지배했었다. 자코뱅(Jacobin)당은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었던 로베스피에르 일당을 체포하여 사형시킴으로써 이를 종식시켰지만, 스스로도 쇠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자코뱅 당으로부터 권력이 <Directorate>라고 불리는 체제를 거쳐 나폴레옹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Consulate>로 집중되었다.16) 프랑스 혁명 후, 위의 사건을 계기로 절대왕정과 같은 나폴레옹 독재가 등장하는 현상을 테르미도르(Thermidor) 또는 테르미도르의 혁명 (Revolution

of Thermidor)이라고 부른다고 한다.17)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의 히틀러 집권을 또 다른 테르미도르(Thermidor)라고 할 수 있다는 데, 같은 의미에서 4.19 혁명 때 대단한 혼란이 있던 후 이를 계기로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권력을 잡은 것도 테르미도르(Thermidor)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히틀러보다는 나폴레옹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나라를 망쳤으나, 박정희의 경우는 그 이후에도 경제성장이 지속된 것이 나폴레옹 이후에도 프랑스 혁명정신이 계속 발전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2) 박정희 혁명주도세력의 속내와 국민적 대세

프랑스 혁명 후 로베스피에르 등의 자코뱅 당과 같은 소수집단이 권력을 잡은 일이 있었고 그 후 나폴레옹도 독재정권을 수립했지만 누구도 프랑스 혁명이 포용형 제도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다.18) 마찬가지로 박정희도 정권을 잡았지만 6.25.전쟁 이후 더욱 간절해지고 있는 빈곤탈피라는 국민적 여망 그리고 해방 이후 점차 자리를 잡아온 민주화 (공산주의 배척을 포함) 열망 및 이승만 본인의 의도와는 다른 이승만 정부 관계자들의 장기집권욕망과 그에 대한 국민적 혐오를 알고는 그것을 처음부터 거스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와 혁명주도세력들이 마음속으로는 영구집권을 하고 싶었을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려 했었다면 그들은 조만간 몇 개의 당파로 갈라져, 조선조의 사색당파처럼, 서로 싸워야 했다. 그리고 조선시대처럼 국민 대부분이 노비나 상인(常人)들처럼 정치에 무관심했었다면, 정치에는 그들만이 참여했었을 것이고, 그랬었다면 우리나라는 혁명주도세력간의 다툼으로, 식민지에서 해방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처럼, 일제 식민지시대보다도 더 피폐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혁명주도세력은 국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위와 같은 열망을 알고 있었고 그런 열망에 반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는, 4.19.혁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게 저항할 힘도 국민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일부 혁명주도세력이 반기를 든 일이 있었지만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혁명주도세력의 핵심인 박정희가 암살당할 때까지 권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개인적인 탁월한 지도능력 탓일 수도 있지만 그의 주변사정 즉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그의 권력 장악 지속에 유리하게 작용한 탓도 컸을 것이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외국세력을 폐퇴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의 신망을 받았지만, 박정희는 우리나라도 공산주의를 근절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정권을 지켜갔다고 할 수 있다.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모두 급격했지만 성공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들 혁명세력이 성공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19)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의한 창조적 파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들 혁명을 지지한 신흥 상인과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

에 이들 혁명이 성공했듯이, 5.16. 혁명 당시에도 해방이후 그리고 특히 6.25.전쟁 중에 깊은 뿌리를 내린 많은 기업가들(그 중 상당수가 다방에만 앉아있는 일인(一人) 회사 사장들이었지만)의 존재, 모든 국민들의 빈곤탈피에 대한 강한 욕망, 미국원조의 감소경향 그리고 장면정부의 무능 등이 군사혁명의 성공을 도왔을 것이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에는 마그나 카르타와 그 이후의 정치발달과정, 계몽주의적 정치사상의 발달 등 포용적인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해방 후 4.19.혁명까지의 기간 동안에 미국으로부터 받은 영향, 북한에서 넘어온 월남 피난민의 공산주의 경험, 4.19.혁명을 지지했던 “침묵하는 다수”의 존재 등은 남한에서 어설피나마 포용적 제도의 발전을 자극하였을 것이다.

특히 산업혁명은 당시 영국의 정치제도가 경제적 필요와 사회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만들었다.20)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군사정권도 당시 우리 사회의 여망인 “빈곤극복”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까지는 포용형으로 만들지 못해도 경제제도는 착취형 체제로 바꿀 수 없었을 것이다.

196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이 자리를 잡았을까 말까 하는 때에 영국의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교수가 북한의 경제기적을 찬양하고 북한이 가난에 찌들려 있는 남한을 압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한다.21)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당시 집권층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박정희가 군인으로 있을 때의 경력으로 보아 이 때 공산주의적 방향으로의 개혁을 했음 직도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신념이 이미 자유민주주의적으로 바뀌어 있거나 그 당시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그와 그의 동료들이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박정희의 정책기조

중요한 경제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이전에 시대적 요청에 맞는 정치경제제도를 불러오는 정치혁명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이전보다 더 포용적인 즉 반독재적인 제도가 도입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22) 우리 경제가 포용적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4.19.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4.19.혁명이 해법다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자, 5.16.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4.16혁명이나 5.16.군사혁명의 주체세력들이 이런 사정을 알고 혁명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5.16.군사혁명 이전과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처했던 여건은 군사정권이 정책을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여왔다. 우선 원조를 보자.

해방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원조는 1957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23) 1962년 혁명정부가 군정을 4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은 경제원조 중단 경고로 대응하였고 이로 인해 혁명정부는 군정연장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미국

원조에 의존해왔고 그래서 이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이 경제 원조를 이렇게 한국정치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쓴 것도 문제지만, 원조는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즉 누가 누구를 돕던, 원조(援助)는 대개 지원액의 10-20%정도만 지원목표대상(target)에 도달되는 것이 원조기관 대부분의 통상적 실적이라고 한다. 즉 원조액의 80-90%가 간접비용(overhead cost)과 부패로 낭비된다고 한다.²⁴⁾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원조도 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다.

또 원조는 어느 신생국에 주어졌던, 식민지시대 이후 유지되어온 기존의 착취형 제도를 보호하는 경향도 있었다는 것이다.²⁵⁾ 그러므로 미국원조가 지속되었었다면 우리나라는 이승만이나 아니면 그의 뒤를 이은 다른 정치인의 독재체제가 지켜져서 4.19.혁명이 일어나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된다. 비록 4.19.혁명이 일어났어도 미국의 원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경제개혁의지가 약해져 경제성장에 매진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원조중단 예고와 그것의 최종적(1972년) 실현은,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우리 경제에는 결정적 전환기(critical juncture)가 되어주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가 중단되지 않았으면 박정희 정부도 수출 진흥정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 수출 진흥정책이 국내정치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음을 당시 혁명주도세력이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박정희 정부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수입대체(輸入代替)산업의 육성에 힘을 쏟고 있었다. 얼른 생각하면, 수입대체산업 육성은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상품을 국내기업이 생산하게 만들어 국내산업도 일으키고 국제수지도 개선하는 일거양득(一舉兩得)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그런데 수입대체산업 육성은 경제적 자립자족(autarky)을 강조하게 되어 외부와의 통신과 거래를 단절하는 경향을 낳는 큰 문제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르헨티나이다. 이 나라는 1930년대까지는 개방적 경제정책을 고수하였으나, 대공황 때 다른 나라들의 예를 따라 수입관세를 높인 이후로는 수입대체산업정책을 고수하는 등 자립자족적 경제(autarkic economy)정책을 더욱 강화해갔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높은 농산물가격을 지지하는 농민세력이 있었다.²⁶⁾ 즉 정치세력이 이런 농민세력을 업고 수입대체정책을 밀고나간 것이다.

박정희 정부도 처음에는 자력갱생을 목표로 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통화개혁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내자(內資)를 거의 조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출 진흥정책으로 선회하게 된 측면도 있었다.²⁷⁾

이렇게 통화개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박 정권이 만약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고수했었다면, 명(明)과 청(淸)이 채택하였던 (그래서 조선조도 따르고 있었던) 쇄국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최근의 북한과 미안마처럼 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외부와 단절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했었을 것이다.

명, 청 시대에 국제무역을 금지한 이유는 이것이 국내정치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으로 신흥갑부가 생기면 이들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 기존 정치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가 수출 진흥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대외개방 따라서 민주화를 지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과거의 영국 식민지 중에서 민주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뿐인데,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그 뒤를 이었지만) 이들 나라들이 민주국가로 발전한 과정을 보면 박정희가 수출 진흥정책을 채택한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미국에서는 광활한 서부가 있어서, 동부지역에서 기존 정치경제세력들이 어떤 착취형 제도를 실시하려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서부로 갔기 때문에 그 제도가 정착될 수가 없었다. 그 이전인 초기 식민지 시대에도 동부지역(버지니아)의 땅이 (당시 주민 수에 비해) 너무 넓어서 주민들(settler)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엘리트 계급에 굶질거릴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착취형 제도가 정착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²⁸⁾

호주에서도 사정은 달랐지만, 결과는 미국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당시 영국보다 더 포용적인 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호주는 처음 한 때는, 미국처럼, 영국 범죄자들의 구치장소(penal colony)로 이용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많은 범죄자들이 강제노역을 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는 빵과 같은 식사만이 제공되었었다. 간수들은 범죄자들의 강제노역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자기들이 처분할 수 있었으나 죄수들의 생산성이 너무 낮아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선 범죄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 해도 그 근처의 섬으로 유배되는 정도에 불과해서 처벌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성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²⁹⁾

이런 난관에 봉착한 간수들은 범죄자들에게 일일 작업량을 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일을 해서 그것을 팔도록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었다. 이렇게 되자 범죄자도 그리고 간수도 돈을 벌 수 있었다. 범죄자들은 자기 생산품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었고, 간수들은 자기들이 하는 사업(일은 범죄자들이 해주지만)을 독점함으로써 큰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양모생산을 위한 양치기 사업이 유망하게 되면서 이런 생산구조는 더욱 유용해졌다. 큰 수의 양을 칠 수 있는 초원이 내륙지방에 널리 퍼져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사태 발전이 호주에서도 포용형 정치경제제도가 정착하는 것에 기여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박정희가 어떤 이유에서건 그 전까지 추진되었던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을 포기하고 수출 진흥정책을 채택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라온 포용적 제도에 대한 열망을 더욱 부추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박정희가 이런 열망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그런 방향으로 갔

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박정희가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지속했었다면 성장은 정체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경제는 미얀마보다도 못한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송나라 때(AD 960-1279)만 해도 신기술개발에서 세계를 압도하고 있던 중국이 약 500-600년 후인 청나라 말기에 와서는 서구열강의 먹이로 전락한 역사에서 비슷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명나라가 원(元)을 물리칠 때만해도 거의 세계최초로 만들어진 소총을 썼을 정도로 진취적이었는데, 명이 자리를 잡은 후로는 대외무역이 상인계급의 세력을 강화시켜 국내정치(지배)질서를 파괴시킬까 두려워 대외무역을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즉 명나라는 14세기 말과 15세기 초에 걸쳐 장거리 대외거래가 그들의 통치체제를 위협할까 두려워 이를 금지했었다.³⁰⁾ 이런 정책은 청(淸)대에 와서도 지속되었다. 이렇게 명, 청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국제무역이 상인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부유해진 상인들이 용기를 얻게 되면 정치 즉 지배계급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잠재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국제무역을 통한 부(富)의 축적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촉진하고 그것이 기존의 정치질서까지 파괴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국제무역을 금지했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대서양 무역의 개통으로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중국은 그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채택하여 고립과 퇴행(退行)을 자초하였으며,³¹⁾ 그 본을 받아 고립제도 뒤에 숨어 있었던 우리나라와 일본도 마찬가지로 고립을 지켰지만, 용케도 일본은 이를 피해 세계열강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었다.

요컨대 박정희의 수출 진흥정책추진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진전에 큰 디딤돌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한 것도 우리나라에는 큰 행운을 안겨준 결정이었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후 이루어진 많은 제도 개혁이 사유재산제도를 강화시켜 주었고 이것이 교통혁명 등의 출현을 자극하여 결과적으로³²⁾ 산업혁명으로 결실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 후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시작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4. 전두환 시대

(1) 개관

박정희가 암살된 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것은 프랑스 혁명과정에서 루이 나폴레옹이 1848년 제2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얼마 안 되어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은 광주항쟁이라는 혼란을 극복하고 박 정권의 수출 진흥정책을 주축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지킨 점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결국 쿠데타를 통해 황제가 된 루이 나폴레옹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두환이 “5.17.조치” 이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³³⁾은 그의 집권이 루이 나폴레옹보다는 순수했음을 입증한다고 할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오래 계속되는 동안에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이를 이용하여 좌파세력이 힘을 모은 것이 광주항쟁으로 나타났음은 주지되는 일이다. 이런 상황 특히 광주항쟁이 일어났음에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은 배경에는 박정희 이전부터 있었던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 내지 빈곤탈피 열망 그리고 해방이후 발전해온 민주주의에 대한 동경이 국민 마음 속 깊은 속에서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두환 정권이 민의와는 관계없이 들어섰지만 군사독제와 같은 착취형 체도를 공고히 하지 않고 박정희 식 경제성장 모델을 견지한 점, 더 구체적으로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안정화정책, 민간주도형 경제를 위한 자율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화를 추진한 것도 4.19.혁명이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이 지속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파키스탄의 예를 통해 보자. 아유브칸(Ayub Kahn) 대통령의 재임 중에는 파키스탄의 경제전망이 대단히 밝았다. 하버드대학 교수들이 이 나라에 대거 파견되어 좋은 안을 많이 내놓았고 그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경제도 눈부시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가 급서한 후, 이 나라는 4.19.혁명과 같은 것으로 표현된 국민적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유브칸 시대의 정책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곧바로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가난한 파키스탄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 4.19.혁명과 같은 것의 뒷받침이 없을 때 우선 그 때까지 시행되어왔던 정치체도가 지탱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뒷받침해야할 경제정책은 당연히 흔들리게 됨으로 성과를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³⁴⁾

전두환은 박정희 시해(弑害) 세력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한 거름 더 나아가서 광주항쟁도 무력으로 진압하였기 때문에 그는 박정희보다 더 강력한 군사독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임기 말에는 노태우와의 합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로 가는 길을 택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국내에서도 전자의 길로 가는 것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고 미국도 반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4.19.혁명 이후 지속되어온 국민의 정신적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은 5.16. 군사혁명이 4.19.혁명과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도 다시 한 번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 경제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경상(무역)수지 흑자

우리나라에서 국제수지표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경상흑자가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1989년 사이의 기간이 왜 우리 경제학계에서는 경시되고 있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1977년에 12백만 달러의 경상수지흑자가 나기는 했지만 이 수치는 통계적 오차(誤差)에 해당할 정도의 작은 규모임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86-1989년 사이에 실현된 경상수지흑자는 그 규모로 보나('86: 46억 달러, '87: 99억 달러, '88: 142억 달러, '89: 51억 달러), 그것이 지속된 기간으로 보나 진정으로 우리 경제가 자립(自立)할 힘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 국민이 단군 이래로 염원해오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부가 국민들과 협력하여 일구어낸 우리나라 경제발전사 상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학계에서는 이 기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때를 전후해서 생긴 3저(3低: 낮은 환율, 낮은 국제금리 및 낮은 유가)현상과 같은 국제환경 요인에만 설명을 집중시키고 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 그 후 우리 경제가 얼마나 도약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1979년 10월 박정희가 피살되기 전후해서 우리 경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1978년 12월 OPEC가 석유가격의 대폭인상을 결정한데에 더해서 혁명정부가 들어선 이란이 석유의 전면적 수출금지를 결정하면서 석유의 국가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는데 여기에 1980년 9월에 일어난 이란-이라크 전쟁은, 석유가격에 관한 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었다.

이 때 급격히 상승한 석유가격은 이상하게도 선진국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더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석유가격 상승과 더불어 다른 국제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급등하여 우리 경제는 극도로 악화된 해외경제여건에 직면하게 되었다. 박정희의 피살로 정치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국제여건의 악화가 가중되면서 인플레이는 더 심각하게 되었고 그 동안 추진되어온 성장우선정책으로 인해 쌓였던 구조적 문제들이 물가, 국제수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더해주었다.

이런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제1차적 수단으로, 정부는 경제안정화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민간주도형으로 실시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재정과 통화정책은 가급적 안정위주로 운용하고 산업정책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시장기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이 3저 현상과 같은 해외여건의 호전과 맞물리면서 위와 같은 경상수지흑자가 실현된 것이다.35)

위의 설명이 미답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들에 의하면 전두환 정부는 1970년대 말부터 중화학공업 프로그램과 같은 일에서 손을 떼게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한국의 방향을 바꾼 배경에는 당시 경제수석이던 김재익의 영향력이 컸다. 김재익은 한국경제를 안정시키고 공평한 경쟁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였다. 그 이후 한국은 정부개입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이다.36)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정책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예상을 넘어서, 실질적으로는 단군 이래 처음으로 경상수지흑자가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으

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경제가 드디어 자립할 수 있음을 만천하에 보인 것에 대해 갖게 된 자부심은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효과를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부는 이처럼 1970년대 말부터 민간주도형 경제운용방식으로의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제도의 도입, 금융시장의 자유화 등의 개혁을 단행하여 사상 초유의 경상수지흑자를 실현한 것이다.³⁶⁾ 다시 말하면, 아직은 우리 경제학계에서 별로 중요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4.19.혁명만큼 중요한 의미를 언젠가는 부여받지 않을까? 생각된다.

4.19.혁명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도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한 사건이라면, 1986-1989년간의 경상수지흑자 실현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을 만천하에 밝힌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을 자랑스럽게 치를 수 있게 되었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IMF 8조국으로의 이행”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세계부국들의 클럽인 G-20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도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980년대의 경상수지흑자 실현은 “경제 분야에서의 4.19.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IMF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허탈과 분노 그리고 모멸감을 크게 느꼈다.”는 사실로서도 이 사건이 그 후에 미친 효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⁸⁾ 우리 경제학계가 이 사건을 가볍게 취급하게 만든 요인이 전두환 정부 때 이 사건이 일어난 때문이라면 우리 경제학계는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5장 대통령 직선제에서 IMF 위기까지

1. 대통령 직선제 채택

어떻게 영국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이나 러시아처럼 개혁의 요구가 일어났을 때 이를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라도 개혁을 단행하여 유혈혁명을 피했을까? 19세기의 처음 30년 동안 영국에서는 권리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정치참여의 확대를 요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심해졌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드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단행하여갔다. 영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과거 수세기 동안 영국에서 일어난 정치과정을 통해 힘을 얻은 (empowered) 국민 대중에 의해 쟁취된 것이다. 영국의 국민대중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투표권을 요구했고 그것을 쟁취했던 것이다.¹⁾

전두환은 7년이나 대통령직에 재임하고 퇴임할 때가 다가오자, 자기에게 부당한 탄압을 받

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86년 유럽순방에서 돌아오자 전두환은 의원내각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아마도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야당과 국민은 전두환의 이런 속셈을 알아차리고 이에 대해 거세게 반대했다.2)

어쨌든 전두환 정권 말기에 우리나라가 직선제개헌을 실시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의 여망을 정확하게 파악한 점도 잘한 것이지만, 그가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국민의 여망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도 본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지극히 잘된 일이다.

그도 사람이고 더욱이 보복 당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에는 그 자신뿐 아니라 5.18.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한 당시 권력층 다수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자기들에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결정하게 된 데는 미국의 영향력도 컸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만약 전두환이 미국의 압력만 어떻게 버티면 장기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믿었어도 직선제 개헌에 동의했을까? 민주주의 전통이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된 필리핀을 보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드리게 만든 힘은 4.19.혁명으로 대표되는 국민적 힘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은 1985년 5월 20일 당시 야당인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가 국회에서 행한 연설 이후의 사태발전예 의해 더욱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국회에서 직선제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통령 직선제가 국민들의 공감을 사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1978년 2월에 이미 윤보선 전 대통령이 3.1.민주선언을 발표한 일이 있었음.) 그 후 1986년 10월 김수환 추기경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음도 많은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부의 이에 대한 반응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1987년 6월 대통령직선제 개헌 요구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전두환은 다음 달인 7월 1일에 6.29.선언을 수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사태가 전두환의 장기집권 가능성에는 불리하게 돌아갔으므로 전두환도 직선제개헌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한 독재자들은 무수히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전두환이 목숨을 걸고 권력을 지키려하지 않은 점은 그의 집권시대에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인 것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 선순환(virtuous circle)의 발동과 공산주의의 부침(浮沈)

영국의 역사를 보면, 일단 법치주의가 절대왕정의 힘을 빼앗은 이후부터는 약한 법치주의에서 강도가 더 높은 법치주의로 이동하는 선순환(virtuous circle)이 일어났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블랙 법(The Black Act)이 제정되어 있었음에도, 평민들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이 법의 집행이 제한을 받은 것이 선순환의 시작을 알리는 좋은 예가 된다. 이처럼 법의 공평한 집행이 강화되면서 어떤 권력자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즉 법(사유 재산제도가 중심)을 위반하면 권력자나 평민이 모두 다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선순환이 영국 역사상으로는 포용형 정치경제제도를 지켜주는 강력한 양(良)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 역할을 했다. 일단 다원주의와 법치주의가 자리를 잡으면 정치과정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자는 다원주의적 요구는 더욱 강해지고, 포용형 정치제도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선순환은 더욱 지속되게 된다. 이런 포용형 제도의 확산은 소득 배분을 더 공평하게 만들어 광범위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empower) 정치적 경쟁무대를 더 공평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과정은 정치권력이 착취적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게 되고 착취형 정치제도를 다시 도입할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이런 것들이 영국의 정치제도가 진정으로 민주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3)

다원주의는 더 개방적인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독립된 언론(言論)의 발전을 허용한다. 언론은 포용형 제도의 지속을 원하는 그룹들에게 이 제도에 위협이 될 것들을 미리 탐지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제도 옹호자들이 그에 대항하는 일을 더 쉽게 해준다. 선순환이 포용적 제도가 지속되도록 만드는데 기여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였거나 불가역(不可逆)적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를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이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투입한 역사가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4)

그럼에도 영국과 미국에서 포용형 제도가 살아남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화된 것은 선순환 때문만이 아니라 역사적 우연(contingent path)도 이에 기여하였다. 포용형 제도의 선순환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지켜줄 뿐 아니라 더 넓은 포용(greater inclusiveness)으로의 문을 더 크게 열어준다. 영국에서 왕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은 엘리트들이 그 권력을 소수에게 내주었지만, 더 많은 사람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5)

포용적 정치경제제도 밑에서 일어나는 양(良)의 피드백의 또 다른 측면은 권력을 잡는 것이 엘리트들의 중심적 즉 필사적 관심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산업화와 개혁에 굴복하는 것은 권력을 잃는 것이었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영국 엘리트들에게는 포용형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졌기 때문에 권력을 지키는 것의 절박성이 더욱 더 약해져갔다.6)

또 선순환은 점진적 변화 또는 개혁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은 혁명과 같이 잘 모르는 길(또는 영역)로 급하게 뛰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 혁명이 영국의 개혁과 다른 점이 이것이다. 처음에는 민주주의가 공포(정치)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두 번이나

왕국으로 변한 후 1870년에 제3차 공화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프랑스혁명 정신이 지속될 수가 있었다.

또 포용형 정치제도는 경제제도가 포용형에서 크게 이탈하는 것을 억제하며 이를 통해 포용형 정치제도 자체도 지켜지게 된다. 이런 포용형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간의 상호지원은 선순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블랙 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 엘리트들이 법치주의 틀을 부서뜨리지 못하게 만든 어떤 힘이 폭력에 의한 진압도 못하게 만든 것이다. 그 이유는 정치권력의 다원주의적 배분이 법치주의 사상 안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포용형 제도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약하게 만들고 이런 힘(또는 제도)은 영국의 정치경제체제를 안정되도록 만들었다.7)

20세기 전반(前半)의 미국의 경험을 보면, 미국의 언론이 광범위한 사회계층에 힘을 실어주고(empowering) 선순환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1913년 미 헌법의 7차 개정을 통해 미 상원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만든 일에는 언론 특히 정치인의 (추문)뒷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muckraker)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포용형 정치제도는 자유언론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뒷조사 전문기자들이 악덕 자본가(Robber Baron)의 주된 공격수 역할도 하게 만들었다.8)

러시아의 경우에는 혁명이 왕국을 무너뜨린 점에서는 프랑스 혁명과 같으나 공산당 독재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더 평등한 제도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피를 뿌리고 말았다. 러시아는 원래 대단히 착취적이었기 때문에 점진적 개혁이 불가능했고, 프랑스처럼 몇 단계를 거쳐서라도 공화국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러시아 사회가 영국과 같은 다원주의적 전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9)

미국과 영국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순환이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항상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일어난 공산주의 혁명은 처음부터 마르크스 이론에 의해 완결(完結)(?)되어 있는 체제였기 때문에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자.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에는 위와 같은 완벽한 공산주의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당시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소위 우파 지도자들은 좌파들의 이처럼 완벽한 공산주의 이론에 대응할 지식과 용기가 없었고, 그들이 “지주는 기생충”이라는 선동적인 말에 대해서조차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물론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였고 그 뒤를 이어 이승만이 서울에 왔지만 이들도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잘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군정이 1946년 7월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좌파측이 훨씬 우월하다고 미군정이 판단한 배경(p. ? 참조)에는 위와 같은 것들이 작용했을 것이다.

미국에서조차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공산주의가 제시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지극히 매력적인 선전에 대해 영국과 미국

을 위시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거의 패닉(panic)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적생공포(大赤色恐怖: The Big Red Scare)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공산주의가 미국에 침투할까 두려워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6.25.전쟁으로 한참 시끄러웠던 1950-1956년 동안에 상원의원 매카시(Joseph Mccarthy)가 주도하는 반공산주의운동이 매카시즘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위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은 당시 미국인들이 공산주의의 침투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10) 유럽연합의 결성을 촉진한 요인 중에도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은 주지되는 일이다.11)

세계정세가 이렇게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소련이 북한지역을 점령하고 한국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상황에 직면한 우리나라로서는 공산주의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미국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할 수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저들이 남한까지 공산화하려는 의도는 여수순천 반란사건과 제주도에서 김달삼 등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4.3.사태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저들은 이 정도로도 포기하지 않고 6.25.전쟁까지 일으켰으니 남한은 스스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했었다.

해방 당시 우리 국민들의 정치경제제도에 대한 지식은 영국 역사에 비추어보면 명예혁명 훨씬 이전의 것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일본의 식민지시대에 알고 있었던 지극히 착취적인 정치경제제도가 최선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해방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일제식민지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었음이 이를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이승만과 그 지지자들이 미국의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즉시 실시하려고 했어도 큰 호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그들도 사람임으로 식민지에서 독립한 다른 나라들의 독립 운동가들처럼 일본의 착취적 제도를 그대로 받아드리고 그 속에서 오래도록 권력과 영화를 누리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당시 군정을 맡고 있던 하지 중장이 이승만이 집권할 경우 그가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은 이승만도 권력욕에 관한 한 보통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12)

영국이나 미국의 역사에서 보듯이, 일단 포용적인 정치경제제도가 실시되면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는 그에 반대하는 세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다원주의와 법치주의 덕분에 더욱도 포용적으로 되어갔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헌헌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는 일이다. 이승만 독재시대라고 지칭되는 6.25.전쟁 중에도 사사오입개헌, 발취개헌 등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헌법이 개정되었지만, 이것은 대통령 선출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조항들만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일은 하지 않았다.

다만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그 예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보안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당면해 있는 존망(存亡)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1948년 이후 공산주의 동조자들이 전향(轉向)하여 가입한 단체가 (국민)보도연맹이다. 이렇게 보도연맹이 결성된 상태에서 북한이 6월 25일에 남침하였는데, 이상하게도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을 머뭇거렸다고 한다.¹³⁾ 이 기간 중 보도연맹 사람들이 서울에서 유력인사들을 잡아서 북한으로 납치해가거나 살해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국군이 낙동강까지 후퇴하면서 보도연맹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보도연맹사람들을 죽인 것이 (특히 인도적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목숨을 걸고 후퇴하는 입장이어서 우파인사를 한사람이라도 살리고 보도연맹 사람들이 북한군의 스파이노릇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다급하게 찾을 때, 이 길밖에는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목숨이 걸린 일이 있을 때에는 다원주의니 법치주의니 하는 것은 좀 한가롭게 생각되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선순환을 여러 번 방해했었다. 4.19.혁명 때가 또 그랬었다. 이승만 독재를 종식시키는 일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었으나, 이를 이용하여 공산주의혁명을 하려하면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엘리트층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산주의를 막는 길을 정치인들이 찾지 못한다면 군인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5.16.군사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의 대두를 막은 것은 일종의 긴급피난(緊急避難)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가 피살당한 후 나라가 어수선해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최규하 과도정부 하에서의 “서울의 봄”(1978년 10월 26일-1980년 5월 17일)이라는 것이 점차로 4.19.혁명 직후를 연상시키는 혼란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다 포용적인 정치경제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느라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의 존망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불안감을 공유하고 있는 지도층의 일부, 특히 해결책을 쥐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군인들이 5.16.혁명 때처럼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가운영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었던”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려 한 것이 1980년 5.17.광주(민주화)사건 이전인지 아니면 그해 12월 12일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원래는 전두환이 정권욕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12.12사태도 긴급피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⁴⁾ 그러므로 전두환 정권기간 중 보다 포용적인 정치경제체제로의 선순환은 표면상 정지되었으나 국민들의 마음 또는 의식 속에서는 포용적인 정치경제체제로의 선순환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은, 1987년에 행해진,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핵심으로 한 6.29.선언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우선 대통령직선제 개헌주장은 1985년 5월 이민우 신민당총재가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미 제기하고 있었고, 둘째로 전두환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두서너 번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강조한바 있었다.

동년 6월 10일 노태우가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것을 계기로 전국 30여

도시에서 대규모폭력시위가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6월 18일 부산 일대에는 위수령(衛戍令)이 발동될 정도였다. 그리고 6월26일에는 전국적으로 100만 여명이 시위에 참가하였지만,15)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노태우와 합작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당시 정권(과 미국)의 판단으로는 공산주의세력이 크게 개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신했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6.29.선언 당시 공산주의세력의 개입이 확실했었다면 전두환은 쿠데타를 해서라도 6월 소요 사태의 진압을 시도했을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정권말기에 그는 자기가 퇴임한 이후에 있을지도 모를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각제개헌을 통해서라도 정권을 연장해 보려는 의도가 없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기 때문이다.

또 당시 전두환 정권의 핵심에 있던 군부 인사들이 이승만 정권 때의 핵심인사들보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영국 엘리트들이 포용형 제도의 확산 속에서 권력을 지키는 것의 절박성이 약해져간 것에 비교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선순환이 포용적 제도의 지속을 부추기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이런 길을 택하게 된 것은 행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6.29.선언은 우리나라의 “명예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나폴레옹과 한 번의 공화국 및 나폴레옹3세의 쿠데타를 거쳐 1870년에 태어난 제3공화국을 아첸오우루 교수팀은 프랑스의 “명예혁명”이라 부르고 있는 점에서 보면 더욱 더 그러하다.

전두환 정부의 김재익이 “경제가 자율화되고 국제화되면 정치적 폐쇄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시장경제가 성장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따라온다.”고 근대화이론을 지지하는 듯한 말(p.?)을 한 것은 사실 그 때 우리나라에서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가 몸소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음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국 엘리트들이 포용형 제도의 확산 속에서 권력을 지키는 것의 절박성이 약해져간 것처럼, 전두환 정권의 핵심에 있던 군부 인사들도 이승만 정권 때의 핵심인사들보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적어졌음은 1976년 이후 1988년까지 지니 계수가 감소해온 사실로(‘76: 0.392, ’80: 0.389, ’82: 0.357, ’85: 0.345, ’88: 0.336)16)도 간접적으로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금융실명제위반과 부패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은 지금까지의 선순환의 진행과정에서 하나의 큰 고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도 아첸오우루 교수팀의 주장대로 선순환은 아래와 같은 3개의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즉 1) 다원적 정치제도는 권력이 한사람 또는 한 엘리트 그룹으로 집중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다원주의는 법치주의 원칙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뿐 아니라 정치제도 앞에서도 평등해야함을 주장한다. 2) 포용형 정치제도는 포용형 경제제도를 지지하고 또 그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3) 포용형 정치제도는 자유언론을 번성하게 하며 언론은 포용제도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을 동원한다.

3. IMF 위기의 원인과 효과

1986-1989년간에 경상수지흑자가 나타난 것은 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우연이 아니었다. 이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뿌듯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느닷없이 우리나라가 파산상태 즉 IMF 위기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때 우리 국민들이 느낀 모멸감은 모르기는 해도 조선조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날 때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때는 이미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랬겠지만, 일본으로부터 외채가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음에도 조선조는 일본 통감부 정책에 이끌려 다닐 뿐 자주적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1902년 2월 “자구(自救)적 저항으로서의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는데¹⁸⁾ 이때에도 이런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IMF 위기 때 일어났던 “금모으기 운동”은 이 국채보상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음 직하기 때문이다.

(1) IMF 위기의 원인

전문가들도 1995년 이전에는 우리 경제의 기본조건(fundamentals)이 튼튼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파산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경제부총리도 우리 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국정과제21”로 정리하여 이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다 시피 한 것은 그가 금융위기가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교육, 정부기능 등 여러 방면에서 개방과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정과제21”의 골자였다.¹⁹⁾

물론 일부 전문가들 특히 외국 전문가들 중에는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후에는 그런 분위기가 훨씬 짙어졌다. 그럼에도 경제부총리의 자세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위기가 오기 전까지 책임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다가오고 있는 금융위기를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우리 경제에는 IMF 위기가 왔다.

그런데 IMF 위기 이후,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 경제의 기본조건이 취약하다는 것(fundamentals)을 금융위기를 오게 만든 첫 번째 요인으로 꼽고 있다. “1995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 등의 --- 수출가격이 급락하고 있었고 일본엔화 절하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었다.”²⁰⁾

어떤 학자들은 1996년 4월 이후 반도체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악화를

거론하고 있다. 충분한 대비책이 없는 금융자유화가 금융부문의 체질을 악화시킨 것이 IMF 위기의 또 다른 요인으로 보고 있다. IMF 위기가 일어나던 해인 1997년 1월, 금융개혁이 절실함을 인정하고 청와대가 금융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금융개혁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정부가 전적으로 받아드려 실천에 옮겼지만, 이미 IMF 위기를 막기에는 너무 때가 늦어버렸던 것이다.21)

그렇다면 김영삼 정부가 만약 IMF 위기와 같은 금융위기를 염려해서 이를 예방하려 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을까? 김영삼 정부가 IMF 위기가 올 것을 처음부터 염려했었다면,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구성되는 인수위원회 때부터 이 문제를 다루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조차 1995년 하반기에 들어와서야 겨우 IMF 위기와 관련하여 무엇인가 낚새를 느꼈고, 부총리는 1997년 중반까지도 “국정과제21”에 열중하고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1993년 2월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에는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조건이 건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영삼 정부의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국내분위기를 보면, 1980년대 사상최초의 경상수지흑자 실현이 여러 곳으로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많은 국민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고, 5.16.혁명 이후 최초의 민간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은 학생들, 특히 좌파들에게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 김영삼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후 강성(強性)을 강화시켜가고 있는 노조로 인해 노사분규가 격화되고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에 착안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었다면 적어도 수출경쟁력은 강화되었을 것이므로 IMF 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했지만, 김영삼이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에는 그런 위험을 느끼지 못했고 김영삼으로서 좌파들에게 인기가 높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전두환, 노태우를 처단하는 일이 더 급했는지 모를 일이다. 우선 강성노조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개혁은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성공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야 나타날 것이므로 김영삼의 정치적 본능에는 맞지 않았을 것이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전, 노 두 대통령을 처단하는 것은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나면서 부정부패의 방지를 통한 경제정의와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으므로 자기의 정치적 인기를 더 높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을 것이다.

1993년 8월 훨씬 전부터 우리 경제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김영삼은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강행하였다. “1990-1991년 중에는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강성화로 인해 근로소득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내수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이와 더불어) 물가상승세가 크게 높아졌으며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후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1992년에는 물가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하였으며 주식시장도 침체국면을 지속하였다.”22) 전, 노 두 대통령시절,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반대여론 때문에, 두 번의 시도가 모두 중지되었던 것을 김영삼은 대통령에 취임하여 정치적 자산 즉 인기가 높은 때를 이용하여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로 인한 효과를 보면 자산소득의 포착이 그만큼 용이해져서 조세증수에는 다소 도움이 되었겠지만 지하경제를 결정적으로 축소시키지는 못했다.23)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반대하는 논거였던 생산 감소, 주가폭락, 자본의 해외도피, 부동산가격의 급등, 사채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도 급증 등은 그대로 현실화 하였다.

금융실명제는 이렇게 경제적 실익을 희생하더라도 경제정의, 부정부패방지와 같은 명분을 살린다는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실천에 옮겨진 것이다. 금융실명제가 IMF 금융위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금융실명제로 인한 생산 감소, 해외자본도피, 중소기업부도의 증가가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생산 감소와 중소기업부도의 증가 등은 우리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해외로 자본이 얼마나 도피했는지 알 길은 없으나 이것이 수출대금의 조작을 통해 이루어지든 국내자본의 도피로 이루어지든 우리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데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경제정의가 실현되었다면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까지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보도가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점도 기대이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IMF 위기가 지나간 현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금융실명제는 IMF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으면 했지 그것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강성 일로(一路)를 걷고 있었던 노동조합 문제를 포함시키고 보면 김영삼 정부는 IMF 위기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은 1987년 6.29.선언과 대통령직전제 개헌 이후 노사분규의 빈발로 극도로 불안해졌다. 이 기간 중에 발생한 노사분규는 대부분 비합법적인 것이었으며 생산중단도 자주 일어났었다.24)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는 1996년 12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제도의 실시를 5년간 유예하는 등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노동시장에서의 힘의 균형이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었다.25)

그런데 만약 김영삼 정부가 노동시장 정책은 노태우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았어도, 우리 경제에 금융위기가 왔을까? IMF 위기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경제의 기본조건이 튼튼하여 금융위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온 많은 전문가들은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했을까? 물론 아무리 경제가 튼튼하여도 외국의 금융자본이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했다면 그것에 말려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음모를 하려면 무슨 꼬투리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만약 음모가 있었다면 금융실명제가 그런 꼬투리를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삼 정부는 적어도 외국 금융자본에게 꼬투리를 제공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특히 김영삼과 그 후임자인 김대중은 전두환 정부의 공적을 무너뜨리는 데 관심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아도 그렇다.26)

(2) IMF 위기의 효과

IMF 위기 당시 IMF 총재였던 캄드쉬(M. Camdessus)는 “한국의 외환위기는 위장된 축복 (blessing in disguise)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²⁷⁾ 그 후에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잘 버티게 된 것이 그 덕분이라면 “축복”이라는 말을 써도 될 법하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6.25.전쟁은 더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6.25.전쟁이 없었더라면,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정신은 조선조나 일제강점기에 가졌던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IMF 위기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정신 차리게 만든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IMF와 제1차 스탠드바이 협약을 맺을 때 우리 정부는 경제정책프로그램으로 “거시경제정책, 금융구조조정, 기타의 구조적 대책으로서 무역자유화, 자본계정자유화, 기업지배 및 기업구조,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 등을 제시해서 합의를 받았다.

그리고 스탠드바이 협약이 IMF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콜금리를 25%로 인상하고 긴축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별 시시콜콜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²⁸⁾ 이렇게 너무도 세세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을 본 국민이면 누구나 상당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 느꼈던 모멸감의 깊이를 알려준다고 할 것이다.

IMF 위기의 두 번째 효과는 당시 우리나라의 좌파 거두(巨頭)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IMF 부총재였던 휘셔(Stanley Fischer)는 김대중 정부를 IMF 위기를 해결한 정부(“The new government in Korea was what saved the situation.”)로 극찬을 하였고,²⁹⁾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 경제가 IMF 위기에서 예상보다 빨리 회복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모두 그의 공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우선 IMF는 대통령 선거중일 때에는 대선후보 전원으로부터, 그리고 김대중의 당선이 유력해진 이후로는 그와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은 오히려 IMF의 공로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³⁰⁾ 지금까지의 IMF 실적에 의하면 피지원국에 대한 IMF의 정책 권고는 대체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한동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IMF가 구조개혁을 부적절할 정도로 과도한 권고를 강요했다는 이유 등으로 강력한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의 권고가 성공했다고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많은 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발생이후 경기회복까지는 평균 2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는 미국국제경제연구소(IIE)의 평가에 반해 우리나라는 1년여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³¹⁾

아첸오우루 교수팀은 나쁜 정책과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것이 실시될 수밖에 없는 정치경제 사회적 배경을 무시하고 IMF가 포용형 제도가 실시되는 나라에서 통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권고하면 그것들은 명목상으로만 실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 예가 짐바브웨이다. 이 나라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대책으로 IMF는 중앙은행을 독립시킬 것을 짐바브웨 대통령에게 권고했고 그에 의해 중앙은행이 독립했으나 인플레이션은 억제되지 않았다.³²⁾ 그 이유는 중앙은행 독립이 법의 통과만으로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의 정책 권고를 그대로 받아드려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IMF가 정책 권고를 할 때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정치경제 사회적 배경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존재해서 그 정책 권고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IMF 위기 이후의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김대중 대통령의 공적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IMF와 약속한 것을 시행하였으므로, 그의 공적으로는 IMF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의 좌파적 성향으로 보아 노동조합을 더 활성화시켜 아르헨티나의 페론처럼 정권을 장기화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좌파들 사이에서는 “50년 장기집권계획”을 짜야 한다는 말들이 상당히 회자되었다고 한다.) 그가 장기집권을 시도했어도 잘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로 인한 국내혼란은 대단히 컸을 것이다. 이런 점은 그의 공로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가 재임 중 5억 달러 이상을 북한에 주어 북한을 “기사회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핵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비난을 평가할 때에는 위와 같은 그의 공적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제6장 IMF 위기 이후

1. 우리 경제의 조락(凋落)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숫자상으로는 1986-87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추세를 보였다. 1997년의 IMF 위기 이후에는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었지만, 이 위기를 가볍게 극복하고 199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0%를 넘기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IMF 위기극복 이후에는 다시 그 전과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김대중 정부 이후의 친(親)노조정책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친(親)기업” 구호를 내걸고 들어선 이명박 정부 때에는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취임초기의 훗불시위와 그 뒤를 이은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인지 성장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맴돌았다.

이런 하락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에 이헌창 교수의 한국경제통사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작성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예측분석('80-'88: 9.1%, '89-'97: 7.4%, '98-'07: 4.7%, '08-'12: 3.8%)에 의지해서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시대가 IMF 위기를 고비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¹⁾ 이 교수 이외에도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과 조락(凋落)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전문가가 많이 있다. 성장률 저하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도 결국 이와 같은 견해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2. 조락 요인

(1) 착취형 제도로의 이행

이헌창 교수는 성장둔화의 원인으로 인구증가율의 지속적 하락, 자본의 한계수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의 감소를 들고 있다. 다른 전문가들도, 표현은 다르지만, 대체로 이와 비슷한 요인을 제시하면서 위기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들은 경제외적인 요인 즉 정치 사회적 요인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인구증가율이 둔화된다고 해도 어떤 요인으로 1인당 생산성이 올라간단든가, 여성이나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 교수를 포함한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은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가 해방이후 “장미꽃도 필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을 인구증가율과 자본의 축적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은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써 명백하다.

이런 점을 좀 더 깊이 검토하기 위해서는 아첸오울루 교수팀의 주장을 따라가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들에 의하면 국가를 쇠퇴하게 만드는 가장 공통되는 요인은 제도가 포용형에서 착취형 제도로 바뀌는 것이다. 왜냐하면 착취형 제도 밑에서는 사람들이 저축과 투자를 할 유인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할 인센티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아첸오울루 교수팀이 열거한 대표적인 역사적 예를 보면 첫째로 로마, 둘째로 아르헨티나와 소련 그리고 셋째가 베니스이다.

첫째로 로마는 기원전 49년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공화국으로서 권력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널리 배분되어 있었고 정치경제제도도 상당히 포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저와 아우구스투스를 거치면서 정치경제제도가 점차적으로 착취형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쇠퇴의 길로 들어갔다.²⁾

둘째로 아르헨티나와 소련은 원래 착취형 국가이기 때문에 성장이 지속될 수 없었다는 것이

아첸오울루 교수팀의 결론이다. 즉 착취형 제도 밑에서는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성장하다가 그것의 한계가 드러나면 성장이 멈추는데 아르헨티나와 소련은 그런 연유로 급격히 성장률이 하락했다.3)

먼저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보자. 최근 금융위기를 겪을 위험성이 큰 나라 중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외국잡지4)에 의하면, 1914년 이전 40여 년 동안은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았고 1인당 GDP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보다도 높았었다. 그러나 1930년 군사쿠데타 이후 국내 산업보호 내지 보호무역 정책, 인기영합정책을 통해 폐쇄적 자립자족(autarkic) 경제를 지향하게 되면서 경제는 후퇴를 거듭했고 지금에 와서는 금융위기의 위협에 시달리는 취약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

러시아는 이미 공산주의 국가시절에 성장이 후퇴하기 시작했었는데, 민주국가가 된 이후에도 형식만 민주국가일 뿐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과두정치적인(oligarchic)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미래성장을 위한 기초를 쌓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하지 않고 석유판매수입이라는 경제력 하나에만 의지해서 푸틴의 정치권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억제하며 세계에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데만”5) 힘을 쏟고 있다.

셋째로 베니스도 한 때는 상당히 포용적인 정치 경제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된 성공으로 경제가 번영을 지속하면서, 권력의 핵심인 대위원회(Great Council)의 회원은 임기가 끝나도 자동적으로 회원으로 선출되게 하는 제도개혁(사실은 기득권의 영구화)을 1286년 단행하였고 이 개혁은 회원의 세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까지 확장되었다. 이렇게 세습제가 확립된 후 이들 회원 간에는 권력투쟁이 격화되었고 그 동안 자유로웠던 해외무역도 국유화되어 버렸다.6)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 베니스는 쇠락에 길로 접어들어 오늘날에는 조그마한 관광항구도시로 전락해있는 상황이다.

위의 세 가지 예는 국가의 제도가 어떤 이유로 포용형 제도에서 착취형 제도로 바뀌게 되면 경제가 쇠퇴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근거로 아첸오울루 교수팀은, 중국이 공산당의 지배 아래 있는 한, 조만간 쇠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7)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소로스”라 불리는 에릭 리(청웨이 캐피털)의 반론이 있다.8) 그는 신분상승 기회(social mobility)가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다는 이유로 중국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응하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내세우고 있다.

에릭 리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이를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은 나라의 먼 미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위험해 보인다. 왜냐하면 나라의 먼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리 낮은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해서 최종적인 방향을 잘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것이 조선조 최만리의 예이다.

그는 당시 선진국인 중국이 문자를 만들지 않았고 오랑캐들만 문자를 만들었음에 의지해서 세종의 한글창제를 반대했었다. 지금 보아서는 최만리의 주장이 당치도 않지만 당시로서는 최만리의 주장에 세종대왕의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정함에 있어 “베이징 컨센서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2) 영국의 교훈

아첸오울루 교수팀의 동서고금을 통한 분석에 의지해서 에릭 리의 주장을 평가해보면 그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제도가 포용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도 경제는 쇠퇴할 수 있다. 영국과 인도가 대표적인 예인데, 아첸오울루 교수팀은 이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먼저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를 이끌어오던 영국이 제2차 대전 이후 보여준 상대적 쇠퇴현상은 포용형 제도를 지키고 있어도 경제는 쇠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영국은 18세기부터 산업혁명을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강의 경제를 이끌어왔으며, 그런 배경에는 명예혁명(1688) 이전부터 영국에서만 발전해온 포용적 제도가 커다란 역할을 했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그런 영국이 그리고 제2차 대전 이후 전승국임에도 불구하고 패전국인 독일(서독)과 일본에 비해 지지부진한 경제성장을 보여 온 것이다.9)

영국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던 시기에는,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는 권력기관들이 상호견제 하도록 권력을 분산시켰고 법치주의와 사유재산제도를 확립하는 등 포용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그런 영국이 1880년 이후 성장률이 저조하여졌으며 특히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선진국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래서 “영국병(British disease)”이라는 말도 한 때 유행하게 되었던 것이다.10)

영국이 이렇게 상대적 쇠퇴를 보인 주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불평등의 해소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영국사회를 주도해갔다. 1660년대부터 영국경제를 이끌어가던 모직 산업이 1730년대에 와서는 방적 산업(cotton industry)에 밀렸다. 이것을 계기로 그 후부터 영국에서는 발명의 붓물이 터지면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발명을 예로 든다면 와트(James Watt)의 증기기관과 아크라이트(Richard Arkwright)의 정방기(精紡機)를 들 수 있다.11)

모직 산업이 방적 산업에 밀린 것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곡물법(Corn Law)의 폐지는 제도면에서의 창조적 파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가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귀족과 중세기의 기술자들인 장색(匠色: artisan)을 희생시키면서 산업생산을 늘려갔으며 이 법의 폐지는 영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집단이 정치제도도 주도적으로 개혁해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산업가들의 이익을 위해, 그 때까지 국내곡물가격을 높게 유지해 토지귀족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었던 제도를 폐지하여, 그 때까지 영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귀족계급을 몰락시킨 것이었다.12)

실제로 곡물법을 폐지하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은 사업으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콕덴(Richard Cobden)이었다. 그리고 이 법을 폐지하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은 당시 보수당 수

상이었고 산업자본가의 아들이며 지주였던 필(Sir Robert Peel)이었던 사실로 보아도 곡물법 폐지는 산업자본가들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13)

이렇게 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던 영국이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의 참상(慘狀)에 눈을 돌린 것이다. 정치경제학자로 유명한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도 빈곤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이란 책을 썼으나, 그의 글만해도 성욕이 빈곤을 촉진한다는 것이어서 빈곤층에 그렇게 호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런데 디킨스(Charles Dickens)가 <크리스마스 캐럴(A Christmas Carol)>을 통해 맬서스를 비판하면서 형세가 빈곤층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14) 그 후 마르크스, 엥겔스, 칼라일, 시드니 웹 부부 등이 빅토리아왕조 시대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배경으로 빈곤층 옹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이론의 창시자들이므로 이들의 이론은 당연히 영국에서는 빈곤층 보호 또는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는 채택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1880년대의 금융경제위기 때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가 크게 일어났고 경제성장이 시민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지에 관해 격렬한 토론이 일어나는 한편으로 사회사업이 여자들의 전문 직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15) 등장한 베아트릭체(Beatrice Ellen Potter, 후에는 Beatrice Sidney)의 주장이 사회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1889년 그녀는 “소비자의 민주주의는 근로자의 민주주의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16) 결국 그녀는 그의 남편과 더불어 페이비언(Fabian) 사회주의를 제창하게 되었다.17)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국에서는 경제발전을 이끄는 사람들에 의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소득과 부(富)만이 아니라 곡물법 폐지에서 보았듯이 정치권력도 재분배되었다.18) 그런데 빈곤문제 해결에 영국사회가 힘을 기울이기 시작한 이후 영국경제를 이끌어오던 사람들의 영향력은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압도되기 시작하였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처칠조차 자유당 정부로 당적을 옮기면서 독일식 실업 및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으로서도 알 수 있다.19) 그 뿐만이 아니다. 올슨에 의하면 자유방임정책 아래에서 노조와 같이 분배를 목적으로 한 단체들이 나타났고 이들 때문에 영국병이 등장했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다는 것이다.20)

이후 영국은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애틀리 정부가 혼합경제에 복지국가제도를 더한 “애틀리 컨센서스(Attlee Consensus)”21)를 들고 나올 정도로 복지국가 쪽으로 기울었고 그로 인해 경제성장은 더욱 뒤로 밀려갔다.

(3) 인도의 교훈

포용적 정치제도의 대표적 형태인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운영해 온 인도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등이 빨리 발전한 이유를 어떤 인도 경제학자는 독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렇게 인도 경제가 오랫동안 정체상태에 있었던 이유는 다른 곳에서 찾아진다.

우선 첫째로 인도가 독립을 쟁취할 때 그 앞장에 섰던 지도자들이 모두 시장을 불신하고 파이비언(Fabian)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적 중앙계획에 심취해 있었다. 이들은 경쟁은 나쁘다고 보았고 가격메커니즘을 경멸했다.22)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일 때 반세기 이상 동안 자유방임정책에 길들여졌었으나 괄목할만한 성장이 없었기23) 때문에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사회주의적인 반작용이 힘을 얻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찌되었던 인도는 영국에서 물려받은 민주주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독립 인도를 이끈 네루가 사회주의적 편향성이 있는데다가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이 컸던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이 경제 분야에의 국가개입을 강조했기 때문이다.24)

이렇게 네루 집안을 중심으로 한 당(Congress 당)이 50여 년 동안 지배해 오며 따라 인도에서는 정치와 관료의 유착이 영구화되다시피 하였다. 영국의 지배(British Raj)가 인도의 독립으로 “the Permit Raj”가 되었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25) 그래서 정치제도는 민주적 즉 포용적이면서도 경제제도가 지나치게 허가제도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렇게 착취형에 가깝게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이에 연유한 사회적 분위기26)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4) <별장(別章)>: 통치불능사태(ungovernability)

조선조가 왜 그렇게 빨리 그리고 제대로 한번 저항도 못해보고 패망했느냐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분석한 글을 보지 못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백성을 남겨두고 홀로 북으로 몽진(蒙塵)한 것을 알게 된 백성들이 화가 나서 궁궐에 불을 지른 일은 있었지만, 임진왜란 중에 별떼와 같이 일어난 의병의 열기(熱氣)로 볼 때 실제로 국민들의 마음이 조선조를 완전히 떠났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조선조 말기에는 일본이 1875년 개항을 요구할 목적으로 일본군함 운양호를 강화도에 보냈고 이 때 전초전에서 조선조가 대패한 것은 사실이나, 이런 패배는 강화도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 이 패배 하나로 조선조가 패망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다 할 전쟁(戰爭)이나 충돌도 해보지 못하고 나라를 일본에 내주고 말았다.27)

이런 현상은 멕시코 원주민의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멕시코 원주민의 나라였던 마야왕국이

소수의 스페인 정복세력에게 쉽게 망한 것은 마야왕국이 너무도 착취적이었을 때 스페인이 침입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원주민들은 마야왕국이 지배하나 스페인 정복세력이 지배하나 자기들의 힘든 처지는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망했다는 것이다.²⁸⁾

조선조가 쉽게 망한 것도 이처럼 당시 지배계급이 너무 착취적이었고 부패해 있어서 국민들은 일본이 아무리 착취한다 해도 조선조보다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조가 쉽게 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해방 후에도 1970년대 이전까지는 일제식민지 시대를 그리워했던 노년층이 많았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싶었던 일본으로서는 이런 민심이반(離叛) 내지 정치적 혼란을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었을 것이다. 1882년 조선조가 구식군대에 모래가 섞인 식량을 배급했기 때문에 구식군대가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정사(正史)이나, 음모적 시각에서 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는 주어야 할 식량에 모래를 섞어 구식군대를 격동시키는 음모는 쉽게 꾸밀 수 있는 것이다. 민 씨 일가가 아무리 어리석었어도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구식군인을 무시했어도 오랫동안 밀린 봉급 미(米)를 모래가 섞인 것으로 줄 때 얼마나 큰 불만이 터져 나올지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임오군란이 일어난 지 불과 2년 후인 1884년에 김옥균 등 젊은이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일도 조선조를 손에 넣고 싶은 일본에게는 너무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청(淸)이 조선조의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싫었을 것이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조선조를 제압해두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김옥균 등을 꼬드길 수도 있는 일이었다. 당시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일본의 조선 침략야욕을 모를 리 없었을 터인데, 그런 지도자급 인사들이 나라를 개혁하려는 엄청난 목적으로 쿠데타를 하려 하면서, 일본공사 한사람 정도의 약속만을 믿고 실천에 옮겼다는 사실은 그들이 정말로 어리석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면 그 나라는 외부의 침략을 받기 쉽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침략을 당하면 그것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나라의 통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 그 나라는 준립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임오군란 이후의 조선조가 이런 심각한 정치적 혼란으로 통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쉽게 망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정치적 혼란 상태에 통치불능사태(ungovernability)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것은 1975년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라는 주장도 있으나²⁹⁾, 영국에서는 광부들의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국의 히스(Heath) 정부가 무너질 때 그리고 미국에서는 뉴욕시가 사실상의 파산에 빠지게 만든 당시의 정치상황을 묘사할 때 썼다는 주장도 있다.³⁰⁾

이 개념은 현재 여러 갈래로 정의되어 쓰이고 있으나, 대표적인 정의로는 첫째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다양해지는 것에 비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은 하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경우. 둘째로 서로 대립되는 세력이 문제의 해결

에 서로 협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나 인센티브를 서로 달리 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지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31)

오페(Offe)는 통치불능사태를 정치적 위기와 그 이후의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잠재성을 지닌 제도적 불충분성(institutional insufficiency)의 상태를 묘사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페는 통치불능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예를 들고 있는데, 영국에서 대처수상이 등장하게 된 것도 통치불능사태에 대한 우익의 반응으로 보고 있다.32)

조선조가 망하기 전까지의 사태는 정부가 너무 무능(부패 포함)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대도 만족시키지 못해서 생긴 첫 번째 정의에 가까운 통치불능사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기대가 너무 컸다기보다는 정부의 무능이 너무 심각했었기 때문에 생긴 통치불능사태라고 할 것이다.

이 통치불능사태라는 개념은 이렇게 조선조가 쉽게 멸망한 것을 설명하는 데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러 번 혼란에 왜 빠지지 않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요즘 왜 우리 경제가 지지부진한지를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해방 후 우리나라가 통치불능사태에 빠진 때를 보면 첫째로 해방 직후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남로당이 중심이 된 각종 소요사태가 있을 때를 가리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군정의 공산당 진압과 남한 단독정부수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으나 단독정부 수립 후 3년도 되지 않아 6.25.전쟁에 휩쓸렸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통치불능사태 여부를 따질 여유가 없게 되었다.

둘째로는 4.19.혁명 직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데모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당의 반대로 장면 정부는 데모 하나 통제할 법을 제정할 수 없었다. 이렇게 극심한 혼란에 빠진 통치불능사태의 배경에는 공산주의자와 그 동조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은 주지되는 일이다. 이 경우도 첫 번째 정의에 가까운 통치불능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5.16.군사혁명으로 일단 해결되었다.

그런데 오페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통치불능사태에 근접한다고 생각됨직한 사건을 찾아보면, 1972년의 유신체제 이후 1979년 부마사태에서 시작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될 때까지의 기간, 그리고 1980년 광주(민주화)사태 및 전두환 정권의 집권 때까지의 여러 사건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중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때는 1972년(5.1%)과 1980년(-2.1%) 두 해(모두 원유파동과 관련이 깊음)뿐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통치불능사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 후에 일어난 IMF 위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명박 대통령 때의 촛불시위 등도 통치불능사태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IMF 위기 이후에는 1999년과 2000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성장률이 5% 이하이었고 또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민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느꼈고 따라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에 1972년 이후 1980년 때보다는 통치불능사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상황은 “불능”에 더 가까운 통치불능사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불능사태는 이명박 정부이후 생긴 현상으로서, 서로 대립되는 세력이 문제의 해결에 서로 협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을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생기는 두 번째 정의에 따른 통치불능사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폭력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 때문에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노력이 건건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어 요즘은 작은 사건으로도 국민 불만이 폭발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까지 표면상 그런대로 안정을 보이고 있는 데는 박 대통령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이 박 대통령의 능력인지 행운인지는, 세월호 사태가 지나간 후에 평가할 수 있는 일이다.

IMF 위기 이후의 통치불능사태에 가까운 형세는 그 기원을 김영삼 정부의 노조에 대한 유화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김대중과 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노조의 강성(強性)은 더욱 강화되어 왔으며 좌파들은 그동안 노조를 강성으로 만드는 데도 기여해왔지만, 한미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농축산업 단체의 결성 및 활동을 자극하였고 도시재개발 등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예외 없이 이에 개입하여 정치적 및 사회적 불안정을 부추겨왔다.

울슨 교수에 의하면, 소득의 재분배를 목표로 한 이익단체들 예컨대 노조, 농축산업 단체 등이 많이 생겨서 분배문제에 대한 정치적 중요성이 높아지면 사회를 더 불화(不和: divisive)하게 만들어 통치불능사태로 이끌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³³⁾

(5) 결 론

지금까지 보아온 바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경제가 IMF 위기 이후 조락(凋落) 현상을 보이게 만든 요인은 크게 보면 정치와 경제면에서 포용형 제도의 후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social mobility의 하락 경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확실한 통계자료를 본 일은 없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때 “부자세”제도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은 경제면에서의 포용제도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정치인 집단과 관료집단 그리고 노동자집단과 농민집단 등이 각각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 특히 관료집단의 이익단체화 및 그와 관련된 부패정도의 심화 등도 포용형 제도의 후퇴를 촉진한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이익단체의 분화 및 발달은 정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 통치불능사태를 국가위기로 변형시킬 수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보아온 바에 의거해서 우리 경제의 결정적 성장 동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해방이

후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를 배우고 수용해온 우리 국민의 의식과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국민은 6.25.전쟁과 4.19.혁명을 통해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를 배우면서 경제도 발전시켜온 것이다. 6.25.전쟁은 우리 국민들이 조선조 이후 그 때까지 지내온 시장에 대한 적대적 자세 내지 문화를 벗어버리고 “애니멀 스피릿(animal spirit)”을 체득하게 했다. 4.19.혁명은, 프랑스혁명이 프랑스의 봉건제도를 폐지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 국민들이 해방이후 배워온 민주주의를 체현(體現)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6.25.전쟁을 통해서 조선조와 일제식민지시대에서 우리 국민의식에 체화되어 있는, “엽전이 별수 있나?”와 같은 말로 표현되는 비관적 의식과 “코리안 타임”으로 이름지어진 게으른 자세가 전부 없어졌다. 이런 비관적 의식과 게으른 자세는 새마을 운동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4.19.혁명이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프랑스 대혁명과 반열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 정신자세를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위 “민주화세력”이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 밖에서 놀고 있다가 큰 형이 부(富)를 일구어 놓은 것을 보고 이에 참여하고 싶어 잔피를 부리는 못된 동생과 같은 존재이며, 나쁘게 말하면 공산주의를 “민주화”라는 덮개를 씌워 우리나라를 북한과 통합하려다가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종북(從北) 세력으로 변신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조락하는 낡새를 보이고 있고, 인구 고령화 및 감소경향, 기술발전의 둔화가 이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해도 발전할 길은 있다. 산업혁명 때 영국도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했지만 그 길을 미리 알고 간 것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 시장 등의 제도는 개인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장한 것뿐이었는데 그 결과가 산업혁명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경제성장을 이끌기도 했지만, 나라 전체 또는 국민 개개인이 경제성장을 지지하고 그에 참여하려는 열의로 가득 찬 분위기가 생기고 유지될 때 경제성장은 진정으로 활기를 띠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수출을 진흥시키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 아니라 미국원조도 끊어지고 수입대체산업도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출 진흥으로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당시의 세계적 분위기로 볼 때 특히 다수 후진국들의 경제정책 방향이 자급자족적인 것이 대세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수출로 방향을 튼 것은 혜안(慧眼)과 선견지명이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설명할 수는 없다. 5.16.군사혁명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보인 데는 정치가 안정된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런 정치적 안정은 6.25.전쟁 중에 친북세력(보도연맹)이 제거되지 않았고, 4.19.혁명 후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좌파세력들의 힘을 5.16.군사혁명으로 빼지 않았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래서 얻어진 정치적 안정 속에서 온 나라가 경제성장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우리 국민들이 6.25.전쟁 중 취득한 “애니멀 스피릿”과 이에 기초한 창조적 파괴(creative creation)로 인한 왕성한 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창조적 파괴는 박정희 시대에 왕성하게 일어났으나 그 결실은 전두환과 노태우 시대에 결실을 보아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 대표적 증거가 경상수지 흑자인데, 이제 박정희 시대의 창조적 파괴는 빛을 잃어가고 있으나 그 뒤를 이을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나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동안 힘을 얻은 세력들이 “정의와 평등 그리고 복지”를 강조하면서 창조적 파괴 정신은 쇠약해지고 있거나 없어지고 있다. 영국처럼 경제적 활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주석(註釋)>

머리말

1) Mancur Olson.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198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4

제1장 모델의 설정

1. 들어가며

1) Sylvia Nasar의 전계서 p.180

2) Mancur Olson. Power and Prosperity(2000). New York: Basic Book. pp.xxvi-xxvii

3) 전계서 p.xxiv

4) 전계서 p.xxviii

5) Acemoglu 등의 전계서 p.44 및 p.68.

서방 선진국의 굴기(崛起)를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바보짓이라고 Olson은 말하고 있다.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p.7

6) Mark Pennington. Robust Political Economy(2011). Cheltenham: Edward Elgar
Series Editor

7) Acemoglu 등의 전계서 p.42

8) 전계서 p.384

9) 전계서 p.369

10) 전계서 pp.388-389

2. 모델의 설정

- 11) Acemoglu 등의 전계서 p.443 Olson도 표현은 다르나 근대화이론을 반대하고 있다.
Mancur Olson.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198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175
- 12) Acemoglu 등의 전계서 pp.70-73
- 13) 전계서 p.443
- 14) Pennington의 전계서 p.192
- 15) Acemoglu 등의 전계서 pp.42-43
- 16) 전계서 p.80
- 17) 전계서 p.74

제2장 착취형 정치경제제도 아래의 조선조와 일제식민지시대

1. 조선조와 유럽의 흑사병

- 1) 조기준. 한국자본주의의 전사: 18세기-1945.
(구분호, 이규익 편) 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한국개발연구원 p.13.
- 2) Acemoglu 등의 전계서 pp.96-100
- 3) 전계서 pp.171-172
- 4) 전계서 p.101
- 5) 복거일. 조선의 노예제도와 재산권. mimeo.
- 6) Wikipedia: Abolition of slavery time-line
- 7) Acemoglu 등의 전계서 p.185

2. 봉당정치와 영국의 명예혁명

- 8) 전계서 p.190
- 9) 전계서 p.185
- 10) 전계서 p.191
- 11) 전계서 p.117
- 12) 전계서 pp.231-234
- 13) 전계서 p.232
- 14) Google (무도즉안전-일간투데이(2009. 9. 7.))
- 15) Acemoglu 등의 전계서 p.119
- 16) 이덕주.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가?(2001). 에디터 pp.50-51
- 17) 임용한. 역사의 아침 2012 p?

18) Olson의 Power and Prosperity pp.174-178

3. 외부충격이라는 결정적 전기에 대한 조선조와 일본의 반응 차이

19) Acemoglu 등의 전계서 p.294

20) 전계서 a. p104

21) 전계서 pp.107-110

22) 전계서 p.294

23) 전계서 p.84

4. 일제식민지시대

24) 이덕주. 식민지 조선은 어떻게 해방되었는가?(2001). 에디터 pp.10-11

25) 조기준. 한국자본주의의 전사: 18세기-1945, 구본호 이규익 편, 전계서 pp.21-24

26) 전계서 p.64

27) 전계서 pp.55-69

28) J. M. Roberts. History of the World(199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650-658, p.678-682

29) Niall Ferguson. Empire(2002). New York: Basic Book p.129

30) 이덕주의 전계서 pp.76-77 및 pp.102-103

31) 이영훈. 시장경제제도의 성립과 발전 p.194. 및
김낙년. 식민지기 공업화의 전개 pp.308-309.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이대근 외)
(2005). 나남

32) Olson의 The Rise and Fall of Nations. p.218.

Olson은 special interest group은 경제성장을 늦춘다고 주장.

33) 전계서 pp.94-99

5. <별장(別章)>: 법치주의

34) Acemoglu 등의 전계서 pp.306-310

제3장 해방에서 4.19.혁명까지

1. 머리말

- 1) 이덕주. 한국현대사비록 pp.17-19
- 2) 이덕주의 전개서 p.31
- 3) 전개서 pp.20-26
- 4) 전개서 p.51. 미국을 선망하는 자세는 조선조 말에도 있었다.
유영익. 한국근현대사론(1992). 일조각 pp.151-162
- 5) 전개서 p.271

2. 6.25.전쟁의 빛과 그림자

- 6) 전개서 p.174
- 7) George A. Akerlof & Robert J. Shiller. Animal Spirits(2009).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x, 및 p.3
- 8) Olson의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pp.80-84
- 9) 이덕주의 전개서 p.176

3. “과두정치의 철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들

- 10) Acemoglu 등의 전개서 p.32
- 11) 전개서 p.36
- 12) 전개서 p.343
- 13) 이덕주의 전개서 p.18
- 14) Acemoglu 등의 전개서 pp.110-111

4. 다원주의(pluralism): 국민에게 힘이 실리는 과정(process of empowering)

- 15) Acemoglu 등의 전개서 p.211
- 16) David Boaz. Libertarianism: A Primer(1997). New York: The Free Press pp.105-114
- 17) Acemoglu 등의 전개서 p.303
- 18) 이덕주의 한국현대사비록 pp.30-31
- 19) 이영훈. 대한민국 역사(2013) 기과장 pp.223-236
- 20) Acemoglu 등의 전개서 p.443
- 21) 전개서 pp.460-61. Olson 교수도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의견이다. 즉 예컨대 독일 프랑스 등은 중앙정부가 확립된 후 이들 나라들의 성장이 빨라졌다고 말하고 있다. Olson의 The Rise and Fall of Nations pp.119-121

제4장 4.19.혁명에서 대통령직선제까지

1. 아첸모글루 교수팀의 한국에 대한 평가

- 1) Acemoglu 등의 전게서 p.71
- 2) 전게서 p.93
- 3) 전게서 p.93
- 4) 이덕주의 전게서 pp.231-232
- 5) Acemoglu 등의 전게서 p.93

2. 5.16.군사쿠데타는 박정희 독재체제를 낳았는가?

- 6) 이덕주의 전게서 p.271
- 7) 전게서 p.283
- 8) 전게서 p.276 및 p.289
- 9) 전게서 p.289
- 10) 전게서 p.397
- 11) Acemoglu 등의 전게서 p.74
- 12) 전게서 pp.444-445 (어떤 중국 상인의 중국 공산체제 찬양론)
- 13) 전게서 p.124
- 14) 전게서 p.82

(1) 4.19.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 15) 전게서 pp.283-285
- 16) 전게서 p.287
- 17) Olson의 Power and Prosperity p.xxiv

프랑스 혁명 때는 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개병 제를 채택하였는데 이것이 프랑스 혁명을 성공시킨 결정적 이노베이션이라고 한다. 박 정권 밑에서 이에 대응할 만 한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새마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슈페터는 비전이 있는 지도자가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다고 보았는데 이점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탁월하다고 할 것이다. Sylvia Nasar의 전게서 p. 190

(2) 박정희 혁명주도세력의 속내와 국민적 대세

- 18) Acemoglu 등의 전게서 p.364
- 19) 전게서 p.362
- 20) 전게서 p.208
- 21) Daniel Yergin & Joseph Stanislaw. The Commending Heights: The Battle for the

World Economy(2002). New Work: Free Press. p.152

(3) 박정희의 정책기조

- 22) Acemoglu 등의 전계서 p.102
- 23) 이대근. 해방 후 경제발전과 국제적 계기,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이대근 편) (2005). 나남 pp.179-184.
- 24) Acemoglu 등의 전계서 pp.450-455
- 25) 전계서 p.452
- 26) The Economist(2014. 2. 15.) Briefing: The Tragedy of Argentina pp.17-20
- 27) 이덕주의 한국현대사비록 p.295
이 시기에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 수출 진흥정책을 실시했으므로 박정희가 수출
진흥정책을 실시하려 했던 것이 다른 나라들을 모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후발국 중에서 수출 진흥정책을 채택한 나라는 별로 없었고 대다수
후발국들이 수입 대체정책을 채택한 것을 보면 박정희에게 혜안(慧眼)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철. 수출주도공업화전략으로의 전환과 성과.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이대근 편)
pp.377-378
- 28) Acemoglu 등의 전계서 pp.20-27
- 29) 전계서 pp.277-281
- 30) 전계서 p.117
- 31) 전계서 p.232
- 32) 전계서 p.197

3. 전두환 시대

(1) 개관

- 33) 이덕주의 전계서 p.379

(2) 우리나라 경제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무역수지 흑자

- 34) Olson의 Power and Prosperity p.43 저개발국에서 강력한 독재자가 있을 때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그 독재자의 지배기간이 지나면 곧 없어진다.
- 35) 한국은행. 한국은행50년사(2000). 연문사문화주식회사. pp.469-470
- 36) 강호진. 전환의 모색과 갈등의 표출: 1980년대. 구본호, 이규억 편. 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1991) pp. 269-273 및 Daniel Yergin & Joseph Stanislaw의 전계서
pp.154-155
- 37) 한국은행. 한국은행 50년사(2000). 한국은행 pp.469-472
- 38) 이규성.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극복. 그 이후.(2006) 박영사 p.i

제5장 대통령 직선제에서 IMF 위기까지

1. 대통령직선제의 채택

- 1) Acemoglu 등의 전계서 p.310
- 2) 이덕주의 전계서 p.401

2. 선순환의 발동과 공산주의의 부침(浮沈)

- 3) Acemoglu 등의 전계서 p.308
- 4) 전계서 p.309
- 5) 전계서 p.310
- 6) 전계서 p.314
- 7) 전계서 p.328
- 8) 전계서 pp.323-324
- 9) 전계서 p.318
- 10) Frederick Lewis Allen. Only Yesterday: An Informal History of the 1920"s(1931)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pp.33-55
- 11) Daniel Yergin & Joseph Stanislaw의 전계서 p.25
- 12) 이덕주의 전계서 p.80
- 13) 전계서 p.121
- 14) 전계서 p.379
- 15) 전계서 pp.402-404,
조갑제닷컴의 최신정보파일: “25년 전 오늘, 역사를 바꾼 6.29선언”
- 16) Google: 우리나라의 소득분배현황
- 17) Acemoglu 등의 전계서 p.331

3. IMF 위기의 원인과 효과

(1) IMF 위기의 원인

- 18) 조기준. 한국자본주의의 전사: 18세기-1945.
(구분호, 이규익 편) 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한국개발연구원 pp.65-66
- 19) 강경식.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2010). 김영사 pp.55-60
- 20) 이규성.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극복. 그 이후(2006) 박영사 pp.123-124
- 21) Inseok Shin, Joon-Ho Hahm. The Korean Crisis-Causes and Resolution.

(KDI Working Paper No. 9805, 1998. 7. 28.) KDI

- 22) 한국은행. 한국은행50년사(2000) 연문사 pp.519-520
- 23) 금융실명제 실시를 통해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있다. Jeffrey Robinson. The Laundrymen: Inside the World's Third Largest Business(1994). London: Pocket Books.
- 24) 박덕제. 노동정책과 노사분규,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이대근 편) p.475
- 25) 전개서 p.477
- 26) 이덕주의 전개서 p.395

(2) IMF 위기의 효과

- 27) 이규성의 전개서 p.ii 및 p.162
- 28) 전개서 pp.164-172
- 29) Daniel Yergin & Joseph Stanislaw의 전개서 p.157
- 30) 이규성의 전개서 p.178
김대중은 후보 시절 자기가 당선되면 IMF와 재협상을 하겠다고 언명한 일은 있었다.
- 31) 전개서 p.ii
- 32) Acemoglu 등의 전개서 pp. 446-447

제6장 IMF 위기 이후

1. 우리 경제의 조락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 1) 이현창. 한국경제통사(2012) 서울: 도서출판 해남 p.633

2. 조락의 요인들

(1) 착취형 제도로의 이행

- 2) Acemoglu 등의 전개서 p.158
- 3) 전개서 pp.119-120
- 4) The Economist(2014. 2.15.). Briefing: The Tragedy of Argentina pp.17-20
- 5) The Economist(2014. 2. 1.). Briefing: Putin's Russia pp.16-18)
- 6) Acemoglu 등의 전개서 pp.152-154
- 7) 전개서 p.151
- 8) 조선일보(2014. 3. 15-16) 토요섹션 Weekly Biz 40대에 갑부(甲富)된 벤처투자귀재
“제2 애플, 중국에서 나올 것”

(2) 영국의 교훈

- 9) Mancur Olson의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p.3
- 10) 전개서 p.3
- 11) Acemoglu 등의 전개서 pp.200-207
- 12) 전개서 p.85
- 13) J. M. Roberts의 전개서 p.625
- 14) Sylvia Nasar의 전개서 pp.4-7
- 15) 전개서 p.86 및 p.101
- 16) 전개서 p.119
- 17) 전개서 p.122
- 18) Acemoglu 등의 전개서 p.206
- 19) Nasar의 전개서 p.137
- 20) Olson의 전개서 p.180
- 21) Yergin & Stanislaw의 전개서 p.9

(2) 인도의 교훈

- 22) 전개서 p.213
- 23) Olson의 전개서 pp.178-179
- 24) Yergin & Stanislaw의 전개서 pp.50-51
- 25) 전개서 p.56
- 26) Olson의 전개서 pp.155-161

(3) <별장(別章)>: 통치불능사태(ungovernability)

- 27) 조기준. 한국자본주의의 전사: 18세기-1945. (구본호, 이규익 편) 전개서 pp.65-66
- 28) Acemoglu 등의 전개서 p.143.
당시의 마야 및 아즈텍 왕국 등의 혹독한 악정(惡政)에 관해서는 J. M. Roberts.
History of the World(199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383-388
- 29) Claus Offe. Ungovernability(PDF). Google.
- 30) Olson의 전개서 p.8
- 31) Iain McLean(ed.). Oxford Concise Dictionary of Politics(199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205.
- 32) Claus Offe의 전개논문
- 33) Olson의 전개서 pp.41-47

(4) 결 론

맺음말